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한국의 보건의료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  
(SDG3) 이행 향상방안  
- 일본과의 비교제도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국제보건전공  
최 윤 아

한국의 보건의료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  
(SDG3) 이행 향상 방안  
- 일본과의 비교제도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지도 김 소 윤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 년 6 월 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국제보건전공

최 윤 아

## 최윤아의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손 명 세           인

심사위원           김 소 윤           인

심사위원           이 명 근           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9 년 6 월 일

## 감사의 글

대학원 입학원서를 제출하였던 순간과 논문을 제출하는 이 순간에도 늘 나를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불완전하며 불안한 매일의 순간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논문 지도에 큰 도움 주신 김소운 교수님, 논문을 쓰고자 하는 마음만 앞섰던 저에게 논문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세심하게 지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명세 교수님, 부족한 저의 논문에 격려와 관심을 보여주시며 논문을 지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근 교수님, 수업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국제보건에 대한 열정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지도로 논문의 완성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해주었던 우리 국제보건 동기들 영미언니, 효정언니, 경원언니, 혜균언니, 준현오빠, 희진이와 예진이, 모두들 수고했고 이 귀한 인연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보건대학원을 통해 만났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나의 꿈을 언제나 응원해주는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늦은 밤 귀갓길을 늘 기다려주셨던 사랑하는 엄마와 대학원 입학부터 졸업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아빠에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대학원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한국 프라마스 남일 부회장님, 박상준 팀장님, 김민중 팀장님 외 많은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지칠 때마다 큰 힘이 되어준 인성이와 늘 함께 웃어주는 나의 친구들에게 고맙다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늘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아 드림

## 차 례

표 차례.....	iii
그림 차례.....	iii
국문초록.....	iv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3. 연구방법 .....	3
II.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한일 비교 .....	6
1. 지속가능개발목표 수립과정 .....	6
2.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	8
3. 일본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	17
4.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	27
III. 보건의료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 현황 한일 비교 .....	40
1. 보건의료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 .....	40
2. 일본의 보건의료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 현황 .....	43
3.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 현황 .....	53
IV.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향상 방안 .....	64
1.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조직의 개선 .....	64

2.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정책의 일관성 유지 .....	66
3.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K-SDGs에 적용 .....	68
4.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한 정부의 관심 .....	69
V. 고찰 및 결론 .....	71
1. 고찰 .....	71
2. 결론 .....	73
참고문헌 .....	77
Abstract .....	83

## 표 차 례

표 1. 지속가능개발목표이행 모니터링 주요항목 .....	16
표 2. 8개의 우선순위 영역 .....	21
표 3.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30
표 4.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SDGs와의 연계성 .....	33
표 5. 보건의료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 (SDG3) 세부목표와 지표 .....	42
표 6. 일본의 SDG3 지표별 이행 성적 .....	43
표 7. 한국의 SDG3 지표별 이행 성적 .....	53
표 8.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	60
표 9. 일본과 한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비교 .....	73
표 10. 일본과 한국의 보건의료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 비교 .....	74

## 그 립 차 례

그림 1. 연구 수행과정 .....	5
그림 2. 2017-2018 SDG Dashboards (일본) .....	17
그림 3. SDGs 추진 본부 조직도 .....	23
그림 4. 2017-2018 SDG Dashboards (한국) .....	27



## 국 문 초 록

2016년 1월에 시작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2016년~2030년까지 전 세계의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 세계의 과제이며,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가난 해결에 중점을 두었던 MDGs와 달리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도 함께 노력해서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SDGs는 국가 수준에서의 노력을 요구하며 SDGs 이행이 잘 이루어지는 가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2016년 SDGs 이행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모니터링을 위해 고위급정 치포럼(HLPF)에 Voluntary National Review를 제출하였다. 국가별 SDGs 이행에 대한 평가를 담은 SDG Index & Dashboard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SDG 이행에 대한 Index 순위는 중위권에 속한다. 한편 세계 3대 경제 강국으로 손꼽히는 선진 국가인 일본의 SDG Index 세계 순위는 한국보다 높은 상위 국가에 속한다. 하지만, 전 국민 대상의 의료보험 보장과 고령화에 대응하는 복지정책은 한국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일본의 SDGs 이행 사례는 앞으로 한국의 SDGs 이행을 보완하고자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SDGs 이행에 대한 국가 계획 중 보건의료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SDG3)를 반영한 양국의 보건정책을 알아봄으로써 한국이 SDGs를 통해 어떻게 국제보건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를 활용하였으며, UN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의 거버넌스 관련 SDG17의 세부목표와 Voluntary National Review에서 요구한 SDGs 이행 점검관련 질문과 2018 SDG

Index & Dashboards에서 국가의 거버넌스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질문을 바탕으로 SDGs 이행 현황을 비교하고, 보건의료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지표를 기준으로 양국의 보건의료정책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SDGs 이행 추진에 대해서 환경부가 중심적 역할을 하지만, SDGs 이행을 위한 국가계획의 보건의료분야 목표는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위한 2030아젠다의 보건의료분야 목표를 제대로 반영치 못하였고, 국내외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수립하지 못하였다.

둘째,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시행 후 2년만에 변경이 되는 등, 2030년까지의 일관성 있는 장기적 이행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한국의 SDGs 이행은 국내와 국외로 나뉘어 각각의 담당기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되기 때문에 한 국가의 정책으로서 일관성을 띄지 않는다.

셋째, 우리나라도 일본 못지않은 전 국민 의료보장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인 문재인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SDG3의 주요과제인 UHC 확립과 연관이 높다. 하지만, K-SDGs 에는 국제보건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일본의 대부분의 SDG3관련 보건의료정책은 국제기구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제협력 프로젝트가 대부분이며, 또한, 국제 회의에서 논의된 아젠다를 SDG3 이행에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MDGs 시대를 이끌었던 UN 반기문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SDGs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 정부와 아베신조 총리는 SDGs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SDGs에 대한 관심을 나타

냈고, SDGs 이행을 국가적 사업으로 이끌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G20국가로서 SDG이행이 모범이 될 만한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SDG3 이행의 개선을 위해 SDGs 이행 정책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비롯한 기존의 조직 체제를 활용한 조직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국정과제와 한국의 경험을 다룬 전 국민의료보장 시스템을 비롯한 한국의 건강정책을 SDG3 이행에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조금만 더 SDGs 이행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국제보건 리더로써,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한국의 역할에 부응하게 될 것이다.

---

Keyword: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SDG3, 보건의료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의 후속 과제로, 2016년~2030년까지 전 세계의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 세계의 공동의 과제로 2016년 1월에 시작되었다(UN, 2015).

SDGs의 시작과 동시에 UN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이행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SDGs 이행 모니터링을 위해 UN은 매 4년마다 각 국가들에게 유엔경제사회이사회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주관 고위급정치포럼 (High-Level Political Forum)에 자발적 국가별 평가 (Voluntary National Review)를 제출하도록 하게 하였다(UN, 2015). 또한, UN 자문기관인 지속가능개발해법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s Solutions Network)는 독일 베텔스만 재단과 공동으로 매년 각 국가별 SDG 초기 이행에 대한 평가를 담은 SDG Index & Dashboards Report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 및 지역자치단체 등은 SDGs 달성을 위한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한국은 2016년에 HLPF에 VNR을 제출하여 SDGs 이행에 대한 점검을 받았고, 한국의 SDG 초기 이행에 대한 SDG Index 순위는 2016년에는 149개 국가 중 27위 그리고 2017년에는 157개 국가 중 31위이었다(Sachs et al., 2016, 2017). 이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한국의

SDGs 이행은 시작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일본은 2017년 VNR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일본은 SDGs 이행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설정과 함께 정부 주도의 이행 체계가 존재한다고 한다 (SDGs Promotion Headquarters, 2017).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국가 중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SDG Index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18위 그리고 2017년에는 11위로 한국보다 높다 (Sachs et al., 2016, 2017). 하지만, SDG3 관련 이행현황을 한국과 비교해봤을 때 건강 및 보건관련 지표의 결과는 유사하다. 일본은 건강과 보건 분야에 대한 자신들의 성공과 교훈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목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리더의 위치에서 세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7). 이에 따라 SDGs 이행에 있어서도 범정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은 OECD 가입 국이며 국가 경쟁력 세계 순위 20위 안에 드는 등 G20 국가이다. 전 국민 보장 건강보험과 높은 건강기대수명 등 일본 못지않은 대표적인 건강국가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현황과 보건의료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 (SDG3) 관련 보건정책을 비교해봄으로써 한국의 SDG3 이행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논문에서는 SDGs의 성취에 중요한 항목인 회원국들의 SDGs 이행을 바탕으로 하여, 일본과 한국의 SDGs 초기 이행과정을 조직, 정책과 체제를 통해 살펴보고, 일본의 건강 중심의 외교정책을 바탕으로 한 SDG3 이행 사례를 통해 한국이 SDGs를 바탕으로 국제보건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SDG3 이행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SDGs의 수립과정과 SDGs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며, SDGs 이행 점검을 위한 UN의 모니터링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일본과 한국 정부의 SDGs 이행의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SDG3를 기준으로 일본과 한국의 보건정책을 비교한다.

넷째,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SDG 3 이행의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 4.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일본과 한국의 SDGs 이행에 대해 비교 분석하여, 한국 정부의 현재 SDG3 이행 수준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연구다. 따라서 본 논문은 UN을 포함한 국제기구와 관련단체에서 발표한 보고서, 일본과 한국의 정부 및 관련기관의 발행물과 신문기사, 홈페이지 자료 등을 1차 자료로 하여, 1차 자료에 대한 연구 및 학술 논문들을 대상으로 문헌 연구를 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SDGs 이행과 관련하여 2016년에 시작된 초기 이행과정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며, 비교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이 각각 2016년과 2017년에 제출한 VNR에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보다 순위가 높은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의 1위부터 3위까지의 국가들과 비교하지 않고 한국보다 조금 높은 일본과 비교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은 이 연구는 SDGs 초기 이행과정에서의 정부의 조직과 체제 등을 주로 볼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다른 사회복지체제의 유럽 국가들과 거버넌스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연구자의 판단이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에 대해 살펴보며, 2장에서는 국제기구와 공여기관들이 이야기하는 SDGs 이행의 중요성과 SDG 이행 모니터링 도구들에 대해 이해한다. 3장에서는 앞 장에서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과 한국의 SDGs 이행 현황과 이행 성적을 통해, 나타난 특징과 차이를 알아본다.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SDG3와 지표를 바탕으로 일본과 한국의 국가 보건정책을 분석하여 마지막 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서 한국의 SDG3 이행의 향상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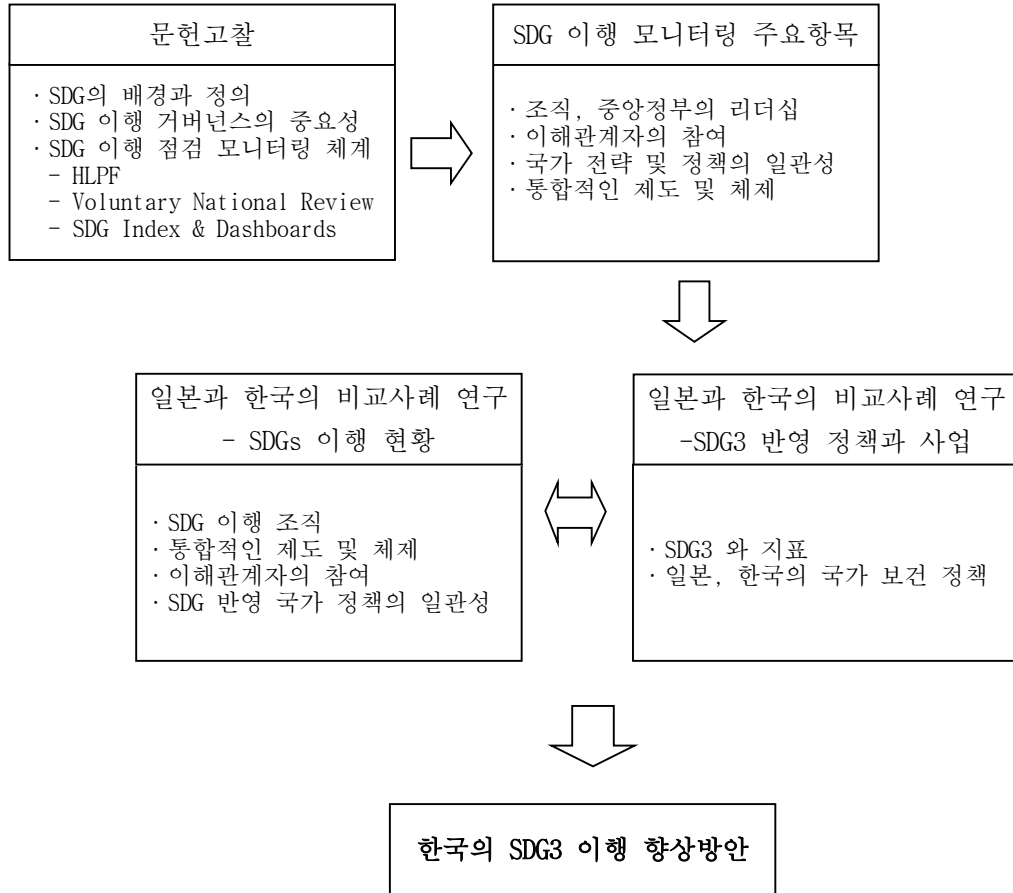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수행과정.



## II.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한일 비교

### 1. 지속가능개발목표 수립과정

#### 가.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UN 새천년개발 목표(MDGs)는 2000년 9월 189개의 유엔 회원국들이 서명한 밀레니엄선언에서 과생되었으며, 세계 지도자들이 빈곤, 기아, 질병, 문맹, 환경 악화, 여성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8가지 목표를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하였다(Kroll, 2015). 8가지 목표들은 (1)절대빈곤과 기아 퇴치 (2)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3)남녀평등 및 여성권의 향상, (4)아동사망률 감소, (5)모자보건 향상, (6)HIV/AIDS와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7)지속 가능한 환경보전, (8)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이다 (Kroll, 2015).

#### 나. 밀레니엄개발목표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로의 전환:

MDGs가 시행된 지 15년 만에 극빈층 인구, 5세 미만 사망률, 모성 사망률, 개발도상국의 영양실조 인구 비율은 1990년 기준치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함에 따라 MDGs는 성공적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로 종료 하였다(Kitaoka, 2016). 비록, 8개의 목표를 다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MDGs는 글로벌 우선 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8가지 목표 세트로 묶어, 측정 가능하고 시간-제한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경제, 사회, 환경적 문제에 대한 인식, 정치적 책임, 개선된 측량법, 사회적 피드백 및 대중의 목소리를 높이는 역할”(Sachs, 2012)을 하였고, 국제기구와 NGOs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구적 합의를 이끌었다는 것에 큰 중요성을 갖는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MDGs의 성공을 이어갈 또 다른 15년의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를 구상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 9월 UN총회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선언하였다.

## 다. 지속가능개발목표: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이라는 비전을 중요테마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인류의 보편적 문제 (빈곤, 건강,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와 지구 환경문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그리고 경제문제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양성일, 2017)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17개의 주요 목표 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UN,2015).

또한, UN은 구체적인 SDGs의 개념과 세부목표들에 대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2030 아젠다)를 발표했는데, 2030 아젠다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청사진을 제공하며, MDGs의 8개의 목표보다 더 포괄적인 목표들을 다루고 있다. 또한, MDGs에 비해 SDGs가 새로운 것은 확장된 개수의 목표뿐만 아니라 확장된 참여이다. 8개의 MDGs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모든 형태의 극심한 빈곤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SDGs는 모든 국가의 참여로 성취가 가능한 것으로 참여의 개념을 분명히 넓혔

다(Kroll, 2015).

## 2.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 가.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의 중요성

SDGs는 모든 국가들의 목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에, SDGs 이행은 곧 국제사회와의 약속임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SDGs는 “완전한 이행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약속”이며 회원국들의 야심찬 실행수단 없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UN,2015). 2030 아젠다는 SDGs 이행의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기에 국가들의 이행에 대한 목표로 SDG 17(이행수단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 활성화)을 수립하는 등 회원국들의 SDGs 이행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몇몇 OECD 국가들의 정책 입안자들은 SDGs 성취를 위한 야심찬 실행수단을 단순히 선진국들의 더 많은 수준의 ODA (Official Development Aid, 이하 ODA) 제공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SDGs는 부유한 나라들에게 다른 나라들을 위한 개발 자금을 증가시킬 것만을 요구하지 않는다(Kroll,2015).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MDGs 특별보좌관으로 일했던 Jeffrey Sachs(2012)는 MDGs의 “아쉬운 점이라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많은 이해당사자들을 하나로 묶는 운영체제의 실패”이며, SDGs의 성취를 위한 중요한 결정 요인은

정부뿐만이 아닌 민간단체를 포함한 모두의 참여와 지방정부에서 세계정부까지의 “모든 수준의 거버넌스의 질” 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SDGs의 성취를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며, SDGs를 반영한 거버넌스의 출현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UN 회원국들은 향후 15년 동안 2030 아젠다 이행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 조치와 모니터링에 참여하기로 약속하였고, UN은 회원국들의 자발적이고 참여적이며 투명한 이행 현황에 대한 리포트 및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는 SDGs 성취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하였다 (UN, 2015). 따라서 UN은 국가들이 2030 아젠다의 이행을 극대화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여 아무도 뒤처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체계를 수립하였다.

## 나.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모니터링 체계 및 수단

### 1) 고위급정치포럼 (High-Level Political Forum):

고위급 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이하 HLPF)은 SDG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의 핵심 요소로 201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설립되었다. 이후, 2016년 UN은 매년 UN 경제사회이사회 (UN Economics and Social Council, 이하 ECOSOC) 주관 각료급 고위급정치포럼을 개최하고, 4년마다 UN 총회 주관 회원국의 정상급을 대상으로 HLPF를 개최함으로써 SDGs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로 합의하였다(홍은경, 2018). 고위급 정치포럼은 기존 규정에 따라 UN총회, ECOSOC 및 기타 관련 기관과 포럼이 일관성 있게 협력하면서 글로벌 수준에서

이행 현황 보고 및 모니터 과정을 감독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UN, 2015).

HLPF의 역할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조치를 위한 정치적 리더십 제공,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 설정, UN 체제와 모든 수준의 거버넌스에 대한 통합과 조정 및 일관성 강화, 모든 지속 가능 개발 목표의 이행과 책무에 대한 진전에 대한 후속 보고, 파트너십을 위한 플랫폼 제공, 의사결정 및 이행에 있어 주요 그룹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강화,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증거에 기초한 의사결정 강화를 포함한다(Abbott and Bernstein, 2015).

그러나 HLPF는 SDGs의 참여자 즉, 국가, 정부 및 관련단체 그리고 민간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의무적인 통제에 대한 권한이 부족하며,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물질적 자원이 없고, SDG의 국가 이행에 대한 검토 또한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참여이기에 포럼의 모니터링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Abbott and Bernstein, 2015).

### 3) 자발적 국가별 평가 (Voluntary National Review):

UN 회원국들은 HLPF를 통해 자발적으로 그들의 국가에 대한 SDG관련 자체보고서 즉, 자발적 국가별 평가 (Voluntary National Review, 이하 VNR)를 제출하고 있다. VNR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년 아젠다의 이행 보고 및 모니터링의 일부로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성공, 도전 및 학습된 교훈을 포함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2016년 22개의 국가, 2017년에는 43개의 국가가 이미 VNR을 제출하였고, 2018년에는 7월에 열린 HLPF에는 47개의 국가가 제출하였는데 이처럼

2016년 이후부터 112개 국가가 VNR을 제출하고 있다(홍은경, 2018).

UN DESA(2018)에서 배포하는 VNR작성을 위한 핸드북(Handbook for the preparation of VNR)에 따르면, VNR의 목적은 각 회원국이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를 실행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VNR에는 국가가 모든 계층의 시민들에게 SDGs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지방자치단체들을 포함한 중앙 정부를 통해 2030 아젠다를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물으며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한 자발적 평가를 요구한다(UN DESA, 2018).

#### **SDGs에 대한 주인의식**

국가 내 모든 시민들이 SDGs에 대해 인식하고 이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뜻하며, VNR에서는 국가 및 지방 정부, 입법 기관, 공공기관, 시민 사회 및 민간 부문 등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2030 아젠다 이행과 검토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묻는다.

#### **SDGs를 국가 프레임워크에 통합**

SDGs를 국가의 현 상황에 맞게 적용시키고 정책 일관성 및 상호 연계성 검토를 포함하여 SDGs 이행을 위해 국가가 수립한 중요한 이니셔티브에 관한 것이다. 국가의 SDGs 전략을 포함하여 국가의 입법, 비전,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에 SDGs를 통합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말한다. 따라서 VNR은 이러한 국가의 프레임워크가 SDGs와 얼마나 부합한지를 분석하고 SDGs와 얼마나 격차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국가의 비전 및 개발 계획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대해 묻는다.

### **(경제, 사회, 환경의) SDGs의 통합**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분야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각각의 분야별 목표들이 어떻게 통합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통합을 반영하기 위해 SDGs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고 구현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VNR은 경제, 사회, 환경적 차원의 통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각 담당 부처 간 상호연계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분야를 통합하는 정책의 좋은 예시에 대해 묻는다.

###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음 (Leaving No One Behind, 이하 LNOB)**

SDGs의 이행에 있어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음의 원칙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대한 평가다. 특히, 여성과 소녀들의 역량강화에 대해 주목하며, 소외된 집단들이 어떻게 식별되고, 소외된 원인 파악과 해결을 위해 국가가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 묻는다.

### **제도적 장치 및 체제**

2030 아젠다에 비추어 국가가 제도적 틀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한 것으로 여기에는 SDGs를 중심으로 정부 기관을 동원하려는 국가의 노력을 말한다. 제도적 장치 및 체제는 SDGs에 대한 국가의 자세가 정치적 주기 전반에 걸쳐 관련성을 유지해야 하며, 국가의 선거 주기에 따라 달라지기 보다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VNR은 SDGs 이행에 대한 책임기관에 기능을 중앙정부가 어떻게 향상시키고, 부처 간의 다른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 묻는다. 또한, 2030 아젠다의 일관성 있는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해 다양한 정부 부처기관의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 묻는다.

### **국가의 SDGs 이행과정의 문제점 및 SDGs의 목표 별 진행상황**

국가가 SDGs를 이행하면서 직면했던 구조적 문제나 장벽에 대한 것과 SDGs의 17개 목표별 진행 상황에 대해 묻는다.

#### 4) SDG Index and Dashboards Report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는 모든 회원국이 SDGs를 반영한 국가 전략을 개발하도록 권장하지만, 회원국들이 SDGs에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행에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침은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침 없이 국가들은 그들의 실속에 따른 우선순위나 국가의 기존 데이터 수집 시스템에 맞는 목표를 정하는 등, 그 국가들이 진정으로 해결해야 할 목표를 정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Stafford-Smith, 2016).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여 UN 자문기관인 지속가능개발해법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이하 SDSN)는 독일 베텔스만 재단과 공동으로 매년 각 국가별 SDG 이행에 대한 평가를 담은 SDG Index & Dashboard Report를 발표하고 있다.

SDG Index& Dashboards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위한 기관 및 전문가 그룹(Inter-Agency and Expert Grou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AEG-SDGs)이 2016년 3월 유엔통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확정된 총 230개의 지표(실제 세부목표 별 제시된 총 241개 지표 중 2~3개의 중복된 지표를 제외) 중 2016년에는 77개, 2017년에는 99개 그리고 2018년에는 111개의 지표를 사용하여 국가들에 SDG 이행에 대한 점수와 순위를 부여하고 비교하였다(Sachs et al., 2016, 2017, 2018).

SDG Index는 SDG 17개의 목표에 대한 각 회원국들의 이행 상태를 순위 매긴 것으로 각국의 SDG 목표치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을 다른 회원국들의 상황에



비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SDG 지수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각의 SDG 17개의 목표에 대한 지표 세트를 기반으로 한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모든 국가의 최소 80%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지표를 포함한다. SDG Index를 계산하기 위해, 각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최악에서 최고 수준으로 순위를 매긴 후, 각 국가에 대해 0과 100 사이에 있는 조정된 지표 점수를 만든다. 이 조정된 지표 점수는 최악과 최고 사이의 국가 배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전체 Index가 70점이라면, 이는 SDG 17개의 목표를 통합하여 평균 70%의 가능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Sachs et al., 2016).

SDG Dashboards는 SDGs 이행에 대한 국가의 성과를 색상 코드 등급을 사용하여 나타낸 SDG 17개 목표에 대한 달성 데이터이며, 현재 국가가 가장 힘써야 할 우선 목표를 나타낸다. 신호등의 색과 비슷한 칼라코드(녹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는 한 나라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목표는 녹색, 노란색, 주황색 또는 빨간색으로 나타나며, 후자는 한 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강조한다. 녹색은 이 목표에 대해 국가가 SDGs와 그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한 좋은 경로에 있거나 SDGs 성취와 일치하는 임계값을 이미 달성했음을 의미한다. 각 기초 지표에 대한 색상 등급을 제공하기 위해 4개의 정량적 임계값(최상과 최저 점수, SDGs 달성 임계값, 빨간색과 노란색 사이의 임계값)을 결정한 다음 해당 SDGs에 대한 지표 전체에서 최소 색상 등급과 동일한 17개의 SDGs 목표 각각에 대해 전체 색상 등급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 SDG3에 대한 1개의 지표에서 빨간색 등급을 받고 다른 모든 지표에 대해 노란색 등급을 받은 경우, SDG3에 대한 해당 국가의 전체 색상 등급은 빨간색으로 할당된다(Sachs et al., 2016).

## 다.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모니터링 주요 항목

SDG 17(이행수단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 활성화)은 회원국들의 SDGs 이행에 대한 목표들이지만, 각각의 세부목표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지표가 없거나 아직까지는 자료가 불충분하여 이행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SDG 17.14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에 대한 지표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증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한 국가의 수’ 이기 때문에 한 국가의 정책일관성 강화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DGs의 시작인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와 SDG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도구인 VNR과 SDG Index & Dashboards에서 제시한 SDG 이행 모니터링의 주요 항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비교 항목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먼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를 살펴보면, SDG 17의 세부 목표로는 국가의 재정, 기술, 능력배양, 무역, 정책과 제도의 일관성,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데이터 및 모니터링과 책임성 등이 있다. VNR은 글로벌 레벨에서 국가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요구되는 주요 5가지 질문 항목들 (SDG에 대한 주인의식, SDG를 국가 프레임워크에 통합, 3분야의 SDG의 통합,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음과 제도적 장치 및 체제)과 2018년 발표된 SDG Index & Dashboards Report에서 G20 국가들의 정치적 리더십과 SDGs 이행을 위한 국가 제도에 대한 10개의 주요 질문이다.

상기 세 자료에서 제시하는 SDG 이행 모니터링에 대한 주요 항목들 중 공통으로 제시되거나 반복 언급되는 것들을 중요하다고 보았고, 중앙정부, 정책,

제도, 이해관계자, 참여, 파트너십, 일관성과 통합 이었다. 연구자는 최종적으로 양국의 SDG현황에 대해 SDG 이행 조직, 이해관계자의 참여, SDG 반영 국가 정책과 통합적인 제도 및 체제를 기준으로 비교하기로 하였다.

표 1.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모니터링 주요항목

SDG 17 : 글로벌파트너십	Voluntary National Review	SDG INDEX& DASHBOARDS (2018)
<b>정책과 제도의 일관성</b>	<b>SDG에 대한 주인의식</b>	<b>국가전략과 행정의 기초 평가</b>
SDG 17.13 정책조정과 정책 일관성 등을 통해 글로벌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강화	· SDG 이행에 있어 모든 분야와 모든 수준의 정부 참여	· 국가 차원에서 SDG의 이행을 승인하는 고위공직자의 공식 성명서
SDG 17.14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	· VNR 준비 및 SDG 이행에 국회 참여	· SDG에 대한 기존 국가 전략의 조정
SDG 17.15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각국의 정책적 제량과 리더십을 존중		· 중앙 정부에 의한 SDG 이행 계획의 채택
		· SDG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통계 기관의 공식적인 주요 국가 지표
		· SDG 성취 상황을 추적하기 위한 중앙 정부의 종합 평가
		· SDG 관련 주요 국가 우선순위과목
		· SDG 전용 국가의 온라인 저장소/웹 사이트 보유
<b>여러 이해관계자의 파트너십</b>	<b>SDG를 국가 프레임워크에 통합</b>	<b>국가 행정부의 조직</b>
SDG 17.16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 전문성, 기술 및 재원을 동원하고 공유하는 여러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에 의해 보완되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	· SDG와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와의 조정	· 부처 및 기관 전반에서 SDG의 이행을 지원하는 주요 중앙 정부 조직
	· SDG를 각 부처의 정책 및 프로그램과 국가의 입법,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에 통합	
	· SDG를 이행을 위한 지방 정부의 조직	
SDG 17.17 파트너십의 경험과 재원조달 전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과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도모		
	<b>3분야의 SDG의 통합</b>	<b>예산</b>
	· 각 SDG와 세부목표에 대한 정부 부처들의 책임 조정	SDG 관련 예산 증가
	· 모든 수준의 정부가 SDG를 통합하기 위해 협력하도록 취하는 중앙정부의 조직	
	<b>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음</b>	<b>입법활동</b>
	· 취약한 그룹 및 그 이유, 취약한 그룹을 지원하고 권한을 주기 위해 취한 조직 파악	· 국회에 SDG 이행 논의 전담 팀/위원회가 설치
	<b>제도적 장치 및 체제</b>	
	· 서로 다른 행위자와 이해당사자를 통합하는 제도적 프레임워크	
	· 모든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SDG와 관련된 전반적인 기관 배치	
	· 최고 수준의 정부가 제도적 조치에 관여	
	· SDG 이행 상황 검토	

출처: UN (2015), UN DESA (2018), Sachs et al.(2018).

### 3. 일본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 가.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성과



출처: Sachs et al. (2017,2018)

그림 2. 2017-2018 SDG Dashboards (일본).

SDGs의 시작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의 Index 점수와 순위를 보면, 일본의 SDGs 이행은 2016년 18위, 2017년에는 11위로 상위 수준의 정도이다 (Sachs et al., 2016,2017,2018). 하지만, 세계 경제 강국 3위로 꼽힐 정도의 선진국가임을 고려하면 SDG 이행에 있어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의 지난 2년간 SDG 17개의 목표에 대한 성과에 대한 Dashboards를 보면 일본은 SDG 5 (성평등), SDG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SDG 13 (기후변화 대응), SDG 14 (해양 생태계 보존) 그리고 SDG 17 (글로벌 파트너십)은 도전

과제로 보인다. 반면에 SDG 4 교육은 상대적으로 성취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SDG 1(빈곤퇴치), SDG 2 (기아종식), SDG 3 (건강과 웰빙), SDG 6 (깨끗한 물과 위생), SDG 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은 양호한 수준으로 보인다.

## 나. SDG 이행을 위한 일본의 국가 전략

### 1) SDGs 이행 지침 가이드 원칙 (The SDGs Implementation Guiding Principle)

SDGs 이행 지침 가이드 원칙 (The SDGs Implementation Guiding Principle)은 2030 아젠다 이행을 위한 주요 과제의 해결에 대한 일본의 국가 전략이다. 가이드 원칙에는 일본의 비전, 우선순위 영역, 이행 원칙, 후속 및 검토 프로세스에 대한 이행 프레임워크 및 접근방법과 더불어 우선순위 영역 하에 묶인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일본 및 해외의 현 상황을 분석한 결과,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와 제휴해, 다양한 대책과 자원을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게 실시함으로써, 모든 부처와 정부기관을 동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SDGs Promotion Headquarters, 2017).

SDGs 이행 지침 가이드원칙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으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개선은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탄력적인 방식으로 달성되는 미래를 향한 리더가 되자”는 비전을 기반으로 수립되었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7). 이는 일본의 VNR에도 보고되었듯이 일본이 얻은

성공과 교훈을 주변 국가들과 공유함으로써 선도적인 솔루션 리더로서 활약하고자 하는 일본의 야심을 나타낸다. 일본은 SDG 달성을 위한 조치의 이행에서 세계의 역할 모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전세계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에서도,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7). SDGs 이행 가이드 원칙에는 또한, 이행의 기준이 되는 이행 원칙으로 보편성(Universality), 포용성(Inclusiveness), 참여 (Participatory), 통합(Integration) 그리고 투명성과 책임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을 수립하였다(SDGs Promotion Headquarters, 2017).

SDGs 이행가이드 원칙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은 국가적 맥락에서 볼 때 SDG중 어떤 분야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8개의 우선순위영역을 설정했다. 일본은 이미 국내적으로 SDG의 목표 중 일부를 달성했지만,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를 포함하였다.

## 2) SDGs 이행의 8개의 우선순위 영역

8개의 우선 영역은 국가적인 맥락에 비추어 일본이 SDGs 중 어떤 분야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8개의 우선순위 분야는 SDGs 이행에 있어 마주친 일본의 국내문제에 대한 대책과 국제협력을 통해 추진해야 할 조치가 모두 포함된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7). 총 8개의 대표 목표아래 27개의 세부전략과 140개의 이행 조치를 세웠다. 8개의 우선순위 영역은 2030 아젠다에서 제시된 5P, 즉 사람 (People), 지구 (Planet), 번영 (Prosperity), 평화 (Peace)와 파트너십(Partnership)에 따라

우선순위 영역을 정하였다 (UN, 2015). 모든 SDG와 각 세부목표들이 분리될 수 없는 통합형 과제이기에 일본의 8개의 우선순위 영역들 또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국가비전이 어느 한 가지 우선순위 문제라도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달성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였기에 우선순위 영역관련 대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표 2. 8개의 우선순위 영역

8개의 우선순위 영역	관련 SDGs
<b>People (인간)</b>	
<b>1) 모든 사람들의 권한 부여</b> - 모든 시민의 역동적인 참여 실현 -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증진 - 아동 빈곤 퇴치 -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위한 지원 - 질 높은 교육의 도모	SDG 1, 3, 4, 5, 8, 10, 12
<b>2) 건강과 장수성취</b> - 평균수에 대한 대책 마련 - 개발도상국 보건분야 강화 및 공공보건과 전염성 질환에 대한 대책향상 - 아시아 내 고령화 문제 해결	
<b>Prosperity (번영)</b>	
<b>3) 성장시장조성, 농촌 활성화, 과학기술 및 혁신 촉진</b> - 잠재력을 지닌 시장 창출 - 도서산간 및 농촌지역의 활성화 - 생산성의 향상 - 과학 기술 혁신 - 지속가능한 도시	SDG 2, 6, 8, 9, 11
<b>4)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토지 이용, 품질 기반 조성</b> - 회복력 있는 토지 창출 및 자연재해위험 경감 도모 - 수자원 개발 및 물 순환 대책 마련 - 질 높은 인프라 투자 도모	
<b>Planet (지구)</b>	
<b>5) 에너지 보존, 재생 에너지, 기후 변화 대책 및 건전한 물질 순환 사회</b> -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도입 및 도모 -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 - 재활용 기반의 사회 구축	SDG 2, 3, 7, 12, 13, 14, 15
<b>6) 생물 다양성, 산림과 해양을 포함한 환경 보전</b> -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 - 생물다양성 보전 - 산림, 해양, 토지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b>Peace (평화)</b>	
<b>7)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b> - 조직범죄, 인신매매, 아동 학대의 퇴치 - 평화구축 및 재건 지원 - 법치사회 도모	SDG 16
<b>Partnership (파트너십)</b>	
<b>8) SDGs 이행을 위한 수단과 기본 틀을 강화</b> - 다자이해관계자 파트너십 - 국제협력에서의 SDGs 주류화 - 개도국의 SDGs 실행을 위한 지원	SDG 17

출처: 홍은경(2018)



## 다. SDG 이행 조직과 참여자

### 1) SDGs 추진 본부 (The SDGs Promotion Headquar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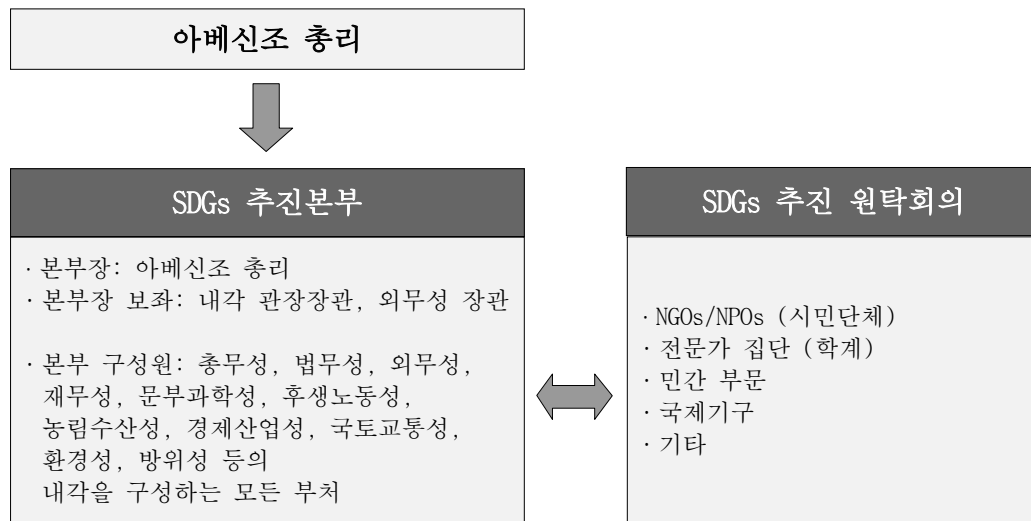
일본은 2016년 5월 국무총리 산하에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SDGs 추진본부' (The SDGs Promotion Headquarters)를 창설하였다. SDGs 추진본부는 내각 관방장관과 외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모든 각료들로 구성되어, 관계 정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고, 종합적인 SDG 추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SDGs 추진본부는 1년에 2회 회의를 열어 SDG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정책 및 세부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결정한다.

본부는 개별적으로 관련 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관련 정부기관과의 긴밀히 협력도 중요시하지만, SDGs 이행 가이드 원칙 (SDGs Implementation Guiding Principles)에 따른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현재 지표를 조정 및 추가하는 등의 SDGs 이행 가이드 원칙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교환 및 협력을 촉진한다. 또한, 2030 아젠다와 SDGs 이행 지침가이드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실행 하는데 에 중점을 두고 있다(SDGs Promotion Headquarters, 2017).

SDGs 추진본부의 설립 당일 첫 회의에서 일본의 SDGs의 이행 가이드 원칙을 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정부는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모색하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이행 가이드 원칙의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만들었다.

## 2) SDGs 추진 원탁회의 (SDGs Promotion Roundtable Meeting)

일본은 SDGs 추진 본부의 지휘아래, 지방자치단체, NGO/NPO, 학계, 민간부  
 문, 국제기구, 국회의원, 과학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  
 처의 대표들로 구성된 2030 아젠다의 추진 및 도입에 관한 SDG 추진 원탁회의  
 (The SDGs Promotion Roundtable Meeting)를 설치했다. SDG 이행에 있어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이 중요한 요소로서, 일본 정부는 원탁회의를 통해 긴밀한 파  
 트너십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다. 각 2016년 9월 과 11월에 진행된  
 SDGs 추진 원탁회의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일  
 본의 SDGs 이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SDGs 추진본부의 2  
 번째 회의에서 일본은 SDGs 이행지침 가이드 원칙을 수립하였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9).



출처: SDGs Promotion Headquarters (2017)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3: SDG 추진 본부 조직도.

### 3) 국회

정부 계획의 원활한 이행과 SDG의 관련 정책을 국가 예산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공명당은 일본 정부의 SDG 관련 일을 지원하기 위해 NGO 등의 시민 단체와 협력하여 "SDG 추진 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일본정부가 SDG이행 가이드원칙 초안을 만들 때,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은 민간의 견해를 듣고 의회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SDGs Promotion Headquarters,2017).

### 4) 지방자치정부(Local Governments)

일본 내 SDG 달성을 위한 전국적인 SDG 이행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지역 이해관계자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SDGs를 최대한 단체의 전략과 정책에 통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정부 부처는 SDG 달성에 있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제휴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VNR에 보고하였다(SDGs Promotion Headquarters,2017). 가와 나가노 현과 같은 일부 지방 자치 단체들은 이미 SDG의 측면을 지방 정책에 통합하기 시작했다. 일본 내각부가 추진한 '미래도시 이니셔티브'는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11개 도시를 모델도시로 지정하였고, 각 도시들은 자립적 발전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SDGs Promotion Headquarters,2017).

### 5)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s, 이하 CSOs) & NGO/NPO

일본 정부는 SDG 이행 추진을 위해 NPO, NGO, 협동조합 및 지역사회와의 파

트너십을 중요시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초점을 맞춘 NPOs와 국제적으로 초점을 맞춘 NGOs와 같은 시민사회단체(CSOs)는 일본이 당면한 과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수행 및 상황 개선 프로젝트 수행 하는 등 일본의 SDGs 이행에 다양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통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난 2016년에는 일본의 SDGs에 대한 ‘일본 시민 사회 네트워크’가 설립되어, 정부가 주최한 SDGs 라운드 테이블 미팅에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참여하는 등 정부와 함께 SDGs 추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SDGs Promotion Headquarters, 2017).

#### 6) 민간기업 (Private Companies):

SDG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기술과 자원이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외에도, 일부 기업은 이미 SDG를 핵심 사업에 통합함으로써 사회 문제의 해결책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SDGs Promotion Headquarters, 2017).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Keidanren)은 일본 기업들의 SDG 관련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SDG를 사업적 관행과 기업의 트렌드로 주류화 하는 등의 기업 활동 현장과 그 지침을 변경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또한 민간 부문의 기업들이 그들의 사업에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SDGs 추진 본부는 민간기업들의 노력에 상응하는 “일본 SDG 어워드 (Japan SDGs Award)”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2018년 12월 국무총리실에서 SDG 어워드 시상식이 열렸고, SDGs 추진본부는 SDG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상자를 결정하여 시상하였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9).

## 7) 국민

SDGs의 국가적 이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본인이 SDG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 SDGs 추진 본부의 리더십 아래, 일본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SDGs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공익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다. 예를 들어, JICA (the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는 체험 전시와 관련된 행사와 세미나를 통해 SDGs에 대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한다. 일본의 미디어들 또한 적극적으로 SDGs에 대해 알리고 있는데, 아사히신문은 2017년 1월 이후부터 SDGs에 관한 시리즈물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니케이 신문은 SDGs에 기여한 회사들의 활동들을 알려왔다. 또한, SDG의 브랜드와 로고의 활용을 촉진하고, 정부가 학교 가정, 직장, 지역 사회를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SDGs에 대해 배우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홍은경, 2018).

#### 4.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 가.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성과



출처: Sachs et al. (2017,2018)

그림 4. 2017- 2018 SDG Dashboards (한국).

한국의 SDG Index를 통해 본 SDGs 이행은 2016년에는 149개 국가 중 27위, 2017년에는 157개 국가 중 31위, 2018년에는 19위로 중상위 수준의 정도이다 (Sachs et al., 2016, 2017, 2018). 2018년 세계경제 포럼 (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제도, 인프라, ICT 보급, 거시경제안정성, 보건, 기술의 인적자원, 생산물 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스템, 시장 규모, 기업 활력, 혁신역량에 대한 통계와 설문을 바탕으로) 순위가 전 세계 140개국 중 종합순위 15위임을 고려한다면 많은 부분에서의 SDGs 이행에 대한 개선이 필

요하다고 보인다(Schwab, 2018).

한국의 지난 2년간 SDG 17개의 목표에 대한 성과에 대한 Dashboards를 보면 SDG 5 (성평등)와 SDG 13 (기후변화 대응)은 한국에게 우선시 되어야 할 도전 과제로 보인다. 다행히도 SDG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과 SDG 13 (기후 변화 대응)은 빨간색에서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변경된 것을 보아 개선되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2017년에는 유일하게 SDG 달성에 가까운 것으로 보였던 SDG 9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은 2018년에는 주황색으로 변경되었고, SDG 2 (기아종식), SDG 4 (교육),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가 양호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SDG 목표들은 한국이 개선해야하는 도전과제이다.

## 나. SDG 이행을 위한 국가 계획과 정책

### 1)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먼저, SDGs의 시작 당시 한국은 박근혜 정부의 집권시기였고, 이 시기에 수립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VNR에 SDGs를 반영한 한국의 국가정책으로 보고하였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이며, 환경부가 담당 부처이다(환경부, 2016).

2000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서, 국내 최초의 경제, 사회, 환경 분야 통합관리 전략 및 실천계획인 “제1차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06~10)”이 발표되었고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공포<sup>1)</sup>되어, 2008년 2월 시행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는 법적장치가 마련되었다(이벽규, 2014).

2016년 1월에 26개 정부 부처들과의 협의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을 수립하였고, 제3차 기본계획의 진행과정은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모니터링을 담당한다(환경부, 201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비전은 환경, 사회,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며, 기후변화의 증가, 생물다양성의 감소, 경제의 침체 등 국가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주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정책적 조치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것은 2030년 의

1) 이벽규(2014)는 이러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제정이유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 21’과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등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추진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였다.



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 양질의 환경 서비스, 사회적 통합과 양성 평등의 촉진, 포괄적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파트너십 강화를 포함한 14가지 전략적 목표를 제공한다(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2016). 제3차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의 각 부처는 소관 과제를 추진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실적들은 평가가 될 예정이다.

표 3.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b>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lt;환경, 사회,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gt;</b>	<b>관련 SDGs</b>
<b>1. 건강한 국토환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품질 환경 서비스 확보</li> <li>·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 확대</li> <li>· 깨끗한 물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li> </ul>	SDG 6, 14, 15
<b>2. 통합된 안심사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li> <li>· 지역 간 격차 해소</li> <li>·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li> <li>· 안전관리기반확충</li> </ul>	SDG 3, 5, 10
<b>3. 포용적 혁신 경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li> <li>·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li> <li>·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li> </ul>	SDG 7, 8
<b>4. 글로벌 책임 국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십 강화</li> <li>·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li> <li>·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li> </ul>	SDG 13, 16

출처: 관계부처합동 (2016)을 재구성

## 2)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7년 5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SDGs 이행에 대한 한국의 국가계획이 수정되었다. 2017년 8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61번째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 강화 등이 이행과제로 채택되면서, 환경부는 제 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K-SDGs)를 발표하였다(환경부,2018). K-SDGs는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의 기틀하에 국가균형발전, 남북 간 평화, 저출산과 고령화 대비 등을 포함하여 한국의 사회발전 비전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2030 국가 비전이다(환경부,2018).

K-SDGs는 지난 2016년 수립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이 UN의 SDGs의 구성과 다르고,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계획의 변경 계획으로서 수립되었다.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비전 아래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인권보호와 남북평화구축, 지구촌협력 등 5대 전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7개 목표 및 122개 세부목표가 제시되었다(환경부,2018). 변경된 주요내용은 환경 분야 과제가 대부분인 기존 계획에서 경제, 사회 분야를 보강하여 저출산 극복 등 214개 지표를 새롭게 추가해 2030년까지의 목표치를 설정했다. UN의 SDGs와 대비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새롭게 추가된 세부목표는 만성질환 대비, 저출산 극복,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 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이 있다.

### 3) 국정과제

한국의 VNR에 따르면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수립된 140개의 국정과제는 SDG를 채택하기 전에 확립되었지만, 채택된 국정과제의 목표와 경제, 사회, 환경 및 정부 문제와 통합할 수 있는 일관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은 SDG 이행의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고 하였다. 140대 국정과제는 42개의 경제 발전, 52개의 사회 발전, 13개의 환경 그리고 23개의 지배와 관련된 목표를 포함한다(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2016).

현 문재인 정부의 100여개의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전체 SDGs의 중요 의제를 나타내는 5Ps (People, Planet, Prosperity, Peace, Partnership)와 크게 유사하고 상호 교차하는 부분이 많다. 대표적으로 '전략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세부 이행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은 SDG3의 UHC수립과 감염성 및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대한민국 정부, 2017). 또한, 61번째 국정과제는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재정립'을 실천과제중 하나로 제시하였는데, 그 세부내용은 현행 환경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녹색성장위원회와 통합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여 경제,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호석, 2017)

표4.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SDG와의 연계성

국정기조	국정과제	관련 SDGs
경제부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조경제</li> <li>· 경제민주화</li> <li>· 민생경제</li> </ul>	2, 5, 7, 8, 9, 10, 11, 12, 14, 17
국민행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 고용, 복지</li> <li>· 창의교육</li> <li>· 국민안전</li> <li>· 사회통합</li> </ul>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6, 17
문화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참여확대</li> <li>· 문화, 예술진흥</li> <li>· 문화와 산업의 융합</li> </ul>	3, 8, 11
평화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튼튼한 안보</li> <li>·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li> <li>· 신뢰외교</li> </ul>	17
추진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뢰받는 정부</li> </ul>	16

출처: 김태균, 김보경, 심예리 (2016)

#### 4) 대통령의 개발협력 이니셔티브

한국의 VNR에는 국제사회를 위한 한국의 SDGs 이행에 대한 대표 정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개발협력 이니셔티브를 제시하였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SDGs 성취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2030 아젠다 “이행에 핵심역할을 담당할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라며 '소녀를 위한 보다 나은 삶'이라는 이름으로 향후 5년간 2억불 규모의 개도국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박근혜, 2015).

## 다. SDG 이행 조직과 참여자

###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992년 리우회의 이후 UN은 여러 나라들에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를 권고하였고, 한국도 김대중 정부 하에서 시민단체, 언론, 학계, 경제계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2000년 9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다(이연호, 2010).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발전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이다. (김호석, 2017)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직속기구로 출범하여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정부정책과 계획을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조율하고, 정책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노무현 정부시절의 제3기 위원회는 대통령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를 직접 관장하는 국정과제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등 그 위상이 격상되어 지속가능발전관련 국정과제에 관한 정책자문과 함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관리정책에 관한 자문을 담당하였다.(이벽규, 2014)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수립으로 국가위원회로서의 위상을 갖추었으며, 정책을 지방자치제 단위에서 실현하기 위한 지역의 지속 가능발전위원회 조직을 함께 갖추게 되었다.(김성욱, 이병량, 2010).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권의 녹색성장정책이 추진되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 기본법의 위치를 박탈당하며 2010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지속가능발전위원

회를 비롯한 유관위원회를 통합하여 2009년 녹색성장위원회라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를 출범하였고 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환경부 장관에게 자문하는 것으로 그 위상이 격하되었으며, 의제설정과 관련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은 사라지며 그 기능도 축소되었다(이벽규, 2014).

2013년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강조하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있던 녹색성장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옮기고 규모도 대폭 축소했다. 현 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지만 녹색성장위원회의 통폐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도 당장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대로 개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고재만, 2018).

현 위원회의 구성은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을 당연직 위원과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법).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은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국가 및 지방 이행계획의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가 지속성 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의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며, 그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2016). 하지만, 2018년 12월에 수립된 K-SDGs는 기존에 행정부처에서 각종 정책 및 계획 등을 먼저 수립한 후 관계 전문가와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과는 달리 계획의 초안 단계부터 K-SDGs 민간작업반<sup>2)</sup>과 K-SDGs 이해관계자 그룹<sup>3)</sup> 등의 90개 이상의 기관과 단체가 포함된 이해관계자그룹의 운영과 두 차례에 걸친 국민 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 후 그 결과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환경부, 2018).

## 2) 중앙부처: 외교부, 환경부

한국은 국내외 SDGs 이행을 위해 여러 개의 중앙정부부처가 각자의 전문분야를 담당하면서 나뉘어 진행하고 있다. 먼저, VNR 제출은 외교부가 담당하며, 국내외 SDGs 관련 정책과 계획에 대해서는 환경부 산하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VNR에 따르면, 외교부는 VNR을 준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환경부, 통계청 등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VNR의 초안을 작성하고 완성함에 있어서, 학계의 전문가, UN의

---

2) 환경부 (2018)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K-SDGs 민간작업반은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을 위해 구성된 시민단체, 정부·공공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작업반이다.

3) K-SDGs 이해관계자 그룹(Korean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은 SDGs의 특징인 목표간 연계성 검토와 수립과정의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 및 일반국민의 신청을 받아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 구성되었다 (환경부, 2018).

사회 개발 연구소를 초대하였다(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2016). 통계청은 SDG 구현을 위한 타당한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3) 지방자치단체

공공 부문-시민사회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시 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역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추진 전략을 자발적으로 수립하고 지역 내에 가능한 SDG 목표들을 이행하며 지역주민들에게 SDG에 관한 정보와 지식의 보급을 담당한다. VNR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서울, 광주, 전주, 수원, 인천을 포함한 기준 100개의 지방자치 단체들이 각 지역 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립하였다(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2016).대표적인 예로, 서울특별시는 2016년 6월 SDG를 위한 도시정책에 관한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도시문제와 관련된 SDG와 목표들을 논의했다(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2016). 또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SDG 정책 대화에 '시 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플랫폼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전국회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의 정책과 이행에 있어 시 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량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2016).

### 4) 국회:

국회는 국가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정치적, 기술적 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2014년 국회의원 18명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임시로 위원회를 소집하였으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법체계에 대



한 지속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 역할을 하였다(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2016). '국회 UN SDG 포럼'은 7개의 정기 포럼을 개최하고 2개의 캠페인과 비전 UN 본부를 출범시킴으로써 SDG와 관련된 다양한 의회 활동을 해왔다(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2016).

## 5) 민간기업

한국의 민간부문은 환경, 에너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엔(UN)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균형발전에 기업들의 동참을 장려하고 국제사회윤리와 국제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한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유엔글로벌콤팩트(The UN Global Compact Korea) 한국협회에서는 280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SDG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과 SDG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 기업의 행동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보급 아이디어에 적극적이다(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2016).

## 6) 시민사회단체:

SDGs에 관한 정책 입안 과정의 참여를 위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의 우선 목표와 국가 이행 목표를 식별하며 SDGs를 분석해왔다. 대표적으로, 2016년 6월에 설립된 SDG를 위한 'SDG를 위한 한국시민사회네트워크'는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 SDG에 대한 대화의 공간을 만들었고, 한국의 VNR 준비 시에도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고, 가장 시급한 SDG 관련 목표를 정부에 제시함으로써 정부와 시민단체들 간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2016). 제3차 지속가능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의사결정자로 참여하지는 못했으나, 이번 K-SDGs 수립 시에는 K-SDGs 민간작업반과 K-SDGs 이해관계자 그룹(Korean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으로서 참여하여 K-SDGs 수립에 의견을 더하였다.

### Ⅲ. 보건의료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 현황 한일비교

이 장에서는 앞서 알아본 일본과 한국의 SDG 초기 이행 시 수립된 국가전략 및 계획 중 두 국가의 보건의료분야의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1. 보건의료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에 따르면 “SDG는 육체와 정신의 건강과 웰빙을 촉진하고 모두의 기대수명 연장을 위해 UHC와 양질의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 달성”을 최우선의 목표로 한다(UN,2015). 이에 따라, 보건의료분야의 지속가능개발목표인 SDG 3는 다음과 같은 세계보건 문제의 개선을 위한 목표들을 수립하였다(UN,2015).

첫째, 2030년 이전에 예방 가능한 모든 사망을 종식시킴으로써 신생아, 아동, 산모 사망률을 줄이는 데 있어 현재까지 이루어진 진전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한다.

둘째,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을 포함하여 성 및 모자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하는데 전념한다.

셋째, 말라리아, HIV/AIDS, 결핵, 간염, 에볼라 및 기타 전염성 질병과 유행성 전염병을 퇴치의 발전 속도를 증가하는 항균 저항력과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미치는 소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똑같이 가속화시킬 것이다.

넷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난제를 구성하는 행동 및 발달 장애, 신경계 질환 등을 포함한 비전염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전념한다.

세부목표는 13개로 이루어져있으며, 모성사망 비를 포함 26개의 이행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UN,2015).

### 표5. 보건의료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 (SDG3) 세부목표와 지표

SDG 3 세부목표	지표
3.1 2030년까지 전 세계 산모사망 비율을 10만 건의 생존출산 당 70건 미만으로 감소한다.	3.1.1 산모 사망률(MMR) 3.1.2 숙련된 보건인력이 진료에 참여한 생명출산의 비율
3.2 2030년까지 신생아 및 5세 미만 아동의 예방 가능한 사망을 종식시키고, 모든 국가는 신생아 사망을 1,000건의 생존출산 당 적어도 12건, 5세 미만 사망을 1,000건의 생존출산 당 적어도 25건으로 감축하는 것을 지향한다.	3.2.1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3.2.2 신생아 사망률
3.3 2030년까지 감염병인 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소의열대질환(NTD) 유행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감염성 질병을 퇴치한다.	3.3.1 비감염인구 1000명당 에이즈 감염자의 수(연령별, 성별 및 주요 인구 별) 3.3.2 연간 1,000명당 TB(결핵) 발병건수 3.3.3 연간 1,000명당 말라리아 발병건수 3.3.4 해당 연도 내 인구 10만 명당 신규 B형 간염 감염자수 3.3.5 소의열대성질환에 대한 치료를 요하는 인구 수
3.4 2030년까지 예방 및 치료를 통해 비감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1/3만큼 감소시키고 정신건강 및 웰빙을 증진한다.	3.4.1 심혈관계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3.4.2 자살로 인한 사망률
3.5 마약류,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치료를 강화한다.	3.5.1 약물남용 장애 치료 (의약, 심리사회적, 재활 및 사후관리 서비스) 보장 범위 3.5.2 국가별 상황에 따라, 주어진 회계연도 안에 (15세 이상의 인구가) 소비하는 1인당 순 알코올 리터 소비량으로 정의되는 알코올의 해로운 이용
3.6 2020년까지 세계적으로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를 절반으로 줄인다.	3.6.1 도로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한 사망률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 성과 재생산 건강을 국가 전략 및 계획에 통합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과 재생산 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한다	3.7.1 현대화된 방식의 가족계획을 필요로 하고 있는 임신 가능한 연령대(15~49세) 여성의 비율 3.7.2 동일 연령대 여성 1,000명당 청소년 (10~14세, 15~19세) 출산율
3.8 계무위험관리,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양질의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달성한다.	3.8.1 일반 대중과 가장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임신, 모성, 신생아 및 아동 건강, 전염병, 전염되지 않는 질병 그리고 서비스 능력 및 접근성 등을 포함하는 추적개입을 기초로 제공되는 필수 서비스의 보장으로 정의되는 필수 보건 서비스 범위 3.8.2 인구 1,000명 당 건강 보험이나 공중 보건 시스템으로 보호를 받는 인구 수
3.9 2030년까지 유해 화학물질, 대기, 수질, 토지 공해 및 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건수를 상당히 감소한다.	3.9.1 집 그리고 집 주변의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3.9.2 안전하지 않은 물, 하수처리 그리고 부족한 위생시설(안전하지 않은 WASH 서비스)로 인한 사망률 3.9.3 의도하지 않은 중독에 의한 사망률
3.a 모든 국가에서 적절하게 세계건강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orld Health Organiz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의 이행을 강화한다.	
3.b 개발도상국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감염성 및 비감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며, 특히 모든 사람에게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의 모든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권리를 확인하는 TRIPS 협정과 공중 보건에 관한 도하선언(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에 따라, 적정가격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3.a.1 15세 이상 인구 중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인구의 연령대별 현황  3.b.1 적당한 가격으로 의약품 및 백신을 지속적으로 구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 3.b.2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 분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총 순 투자
3.c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과 군소도서개도국에서의 보건 재원과 보건인력의 채용, 개발, 훈련, 보유를 대폭 확대한다.	3.c.1 보건근로자 밀도 및 분포
3.d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국가적 세계적 보건 위협에 대한 조기경보, 위험 감축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3.d.1 국제 보건 규정에 의한 수용능력 및 응급대처능력

출처:UN (2015)

## 2. 일본의 보건의료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 현황

### 가. 일본의 SDG3 이행 성적

표6. 일본의 SDG3 지표별 이행 성적

SDG3 (보건의료) 지표	이행성적	
	2017	2018
3.1.1 산모 사망률(MMR)	녹색	
3.2.2 신생아 사망률	녹색	녹색
3.2.1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녹색	녹색
3.3.2 TB(결핵) 발병건수 (10만 명당)	노란색	노란색
HIV 유병률 (천 명당)	녹색	녹색
3.4.1 (30-70세 사이의 연령 표준화 된) 심혈관계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10만 명당)	녹색	녹색
3.9.1 집 그리고 집 주변의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연령표준화, 10만 명당)	녹색	녹색
3.6.1 도로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한 사망률 (10만 명당)	녹색	녹색
출산 시 건강기대수명 (년)	녹색	녹색
청소년 출산율 (15-19세 사이의 여성청소년 1000명당)	녹색	녹색
3.1.2 숙련된 보건인력이 진료에 참여한 출산의 비율	자료없음	녹색
WHO가 추천한 2개의 백신을 맞은 영아의 생존율 (%)	녹색	녹색
보편적 건강보장 추적지표 (Universal Health Coverage Tracer Index) (0-100)	녹색	녹색
주관적 웰빙 (0-100)	녹색	노란색
출산 시 기대수명 지역 간 격차 (Gap in life expectancy at birth among regions) (년)	녹색	녹색
자기보고 건강상태 소득 간 격차 (Gap in self-reported health by income) (0-100)	녹색	녹색
3.a.1 15세 이상 인구 중 흡연율	녹색	녹색

출처: Sachs et al. (2017,2018)

일본의 SDG3 이행 성적을 보면 건강국가답게 전체적으로 SDG3 달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또는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30세에서 70세 사이에 사망할 확률 (모든 연령에서 현재 사망률을 가정, 개인

이 다른 사망원인으로 사망하지 않을 경우), 즉 비감염성질환으로 인해 70세 이전에 사망하는 30세의 성인의 비율이 UN 회원국들 중 가장 낮다.

다만, 선진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결핵발병건수가 높다는 점과 신체적 건강은 우수하지만 낮은 삶의 만족도(주관적 웰빙)는 도전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특정연도 기준 HIV에 감염된 사람의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결핵 신규 및 재발 예상 환자 비율이 2017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17명에서 2018년은 16명으로 으로 개선의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Sachs et al, 2017,2018). 주관적 웰빙은 삶에 대한 주관적 자아 평가로 설문지에 0 (최악의 삶)부터 10 (최상의 삶)까지 나타내는 설문으로 평가 되는데, 일본국민들의 주관적 웰빙은 2018년 기준 5.9로 육체적 건강 수준에 비해 높지 못하다(Sachs et al, 2017,2018). 또한, 일본은 지난 약 60년 동안 전 국민 보장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 성과와 최고 수명을 달성한 기록을 갖고 있지만, 일본이 제출한 VNR에 따르면, 일본의 평균 건강 수명과 평균 총 수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DGs Promotion Headquarters, 2017).

## 나. 8가지의 우선순위: (2) 건강과 장수 성취

일본정부의 SDGs 이행 지침 가이드 원칙의 8가지의 우선순위 영역 중 두 번째로 '건강과 장수성취'에 대한 목표는 전반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국제보건 문제를 위주로 수립하였다. 특히, 이행조치로 과거로부터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국제보건 사업들을 포함시켰고, 세계보건 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도모하는 등의 글로벌 파트너십이 드

러났다. 주요 세부전략으로는 (1) 항균제에 대한 대책 마련, (2) 개발도상국 보건 분야 강화 및 공공보건과 전염성 질환에 대한 대책 향상 그리고 (3) 아시아 내 고령화 문제 해결이 있다. 8가지 우선순위에 계획된 일본의 국내외 SDG3 관련 보건 정책들의 세부 조치는 다음과 같다.

### 1) 모든 시민의 역동적인 참여를 위한 일본 계획 (the Japan's Plan for Dynamic Engagement of All Citizens): 사회보장과 건강일본 21

먼저, 8가지 우선순위 영역의 첫 번째 우선순위 목표인 모든 사람들의 권한 부여의 세부 이행과제로 모든 시민의 역동적인 참여 실현이 있다. 아베 내각은 모든 시민의 역동적인 참여를 위한 일본 계획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난치병환자를 비롯하여 노인, 청년과 남녀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만들기 위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과 건강일본 21 이행을 위한 세부목표와 조치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은 가족 구성원의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례를 없앤다는 분명한 목표로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여 국민이 마음 놓고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계가 자신이 선택한 간병 서비스를 사용하고 관리하기 쉬운 방식으로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하여 가족 구성원의 일과 간병 관리를 양립할 수 있도록 한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7).

기존의 건강증진법을 바탕으로 기업,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와의 제휴를 통해 인구의 건강한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향후 10년간 다양한 건강 지표와 건강 목표치를 책정하는 '건강 일본 21 (Health Japan



21)'을 수립하였다(SDGs Promotion Headquarters,2017). 세부 지표로는 생활 습관 관련 질병 위험이 높은 과음자의 비율 감소 및 흡연 성인의 비율 감소로 수립하여 보건 복지부가 담당한다.

## 2) 건강과 장수 성취: 감염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2030 아젠다 SDG3의 세부목표 3.3 (2030년까지,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그리고 소외 열대 질병과 간염, 수인성 질병 그리고 다른 전염성 질병들의 전염병을 종식)과 일치하는 일본 내 감염병 예방에 대한 조치와 세부목표 3.4(2030년까지 예방과 치료를 통해 전염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3분의 1로 줄이고 정신 건강과 웰빙을 촉진)과 일치하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SDGs 추진 본부가 배포한 SDGs 이행 가이드 원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은 모두 보건복지부가 담당 이행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SDGs Promotion Headquarters,2017).

### 신종 감염병 대책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책 강화의 실천방안을 토대로 하여, 보건 의료 서비스, 시험·연구 시스템, 감염병에 대한 인적자원 기반 등 개선된 국내 체제를 구축하여 감염병 대응이 강화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 B/C형 간염 종합대책 추진

정부는 간염 대책 기본법 및 간염 관리 대책 추진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 (1) B형 간염, C형 간염의 항바이러스 치료비 보조
- (2) 바이러스성 간염 선별 추진

- (3) 감염 치료제도 개선
- (4) 감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확산
- (5) 더 나아가서는 B형 감염의 연구를 촉진하고, 정기적으로 B형 감염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AMR)에 대한 국가 조치계획의 이행**  
6개 분야(대중의 인식 개선 및 교육, 감시 및 모니터링, 감염 예방 및 통제 등)에 대한 대책을 실시하여 항생제 내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항균성 유기체에 의한 대유행을 방지한다.

### **암 관리의 추진**

암 관리법 (the Cancer Control Act)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암 관리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암 치료에 관한 상담, 지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 완화되고 삶의 질을 향상되며 암 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 **3) 항생제에 대한 대책 마련**

SDGs 추진 본부 가 배포한 SDGs 이행 가이드 원칙에 따르면 일본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장려하는 국제사회 무대에서 리더십 발휘를 위해 일본의 내각관방이 주요 책임자이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해외 인재 양성을 위한 대책에는 문부과학성이 책임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SDGs Promotion Headquarters, 2017).

### 신종 감염병 대책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책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에 따라, 다양한 국제기관이 협력할 수 있고, 감염병 비상시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체계적인 구조를 갖춘 국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서의 감염병 대책의 강화, 감염병 대처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및 파견 등과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

### 항생제 내성(AMR)에 대한 국가 조치계획의 이행

일본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항생제 내성 (AMR) 노력을 지원하고 이 문제에 대한 글로벌 정책 이행을 지원한다. 동시에 민관 협력을 촉진하여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글로벌 보건 협력을 증대시킨다.

### 개도국 내 전염병 대책을 위한 민관합동회의

일본의 의료산업과 국가정부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국제 전염병 대책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고, 또한 일본을 포함한 의료산업이 새로운 시장을 찾도록 도울 것이다.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발연구 추진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신종 감염병 대책 강화 기본조치계획을 바탕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해외 파트너 연구기관에서 역학 연구와 진단 및 치료 연구를 포함한 병원균에 대한 기초연구를 추진한다(SDGs Promotion Headquarters, 2017). 또한 소외열대성질환(NTD)의 경우, 일본과 아프리카의 대학 및 다른 연구시설에서 약의 개발을 포함한 질병을 예방, 진단, 치유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사회의 개발된 방법의 실용화를 위해 노력하며, 공동연구를 통해 아프리카의 젊은 연구자들을 양성한다(SDGs Promotion Headquarters, 2017).

#### 4) 개발도상국 보건 분야 강화 및 공공보건과 전염성 질환에 대한 대책 향상

일본 정부는 메르스, 에볼라와 같은 국경을 초월하는 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보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 포럼에서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아베신조(2015) 총리가 “일본의 국제 보건 우선순위는 공중 보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보건 시스템을 구축하고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건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을 강조했기에, 이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조치들이 이행되고 있다. SDGs 추진 본부가 배포한 SDGs 이행 가이드 원칙에 따르면 비전 제시나 프레임워크 개발 등의 국제사회와 협력을 필요로 하는 외교적 업무는 외교부를 주축으로 진행하며, 재정적 원조의 기여가 필요한 정책에는 일본 재무성이 담당한다(SDGs Promotion Headquarters, 2017).

##### 평화와 건강을 위한 기본 설계에 따른 지원 제공

일본 정부는 SDG3에 설정된 보건 관련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 9월 평화와 건강을 위한 기본 설계(the Basic Design for Peace and Health<sup>4)</sup>)를 승인했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5). 일본 정부는 디자인에 입각한 국제공조를 추진한다.

##### 국제보건을 위한 G7 이세시마 비전의 꾸준한 이행

---

4) 2015년 2월 일본 정부는 3대 기본방침(1. 비군사적 목적을 위한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에 기여, 2. 인간 안보 증진, 3. 일본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협력은 물론 자립을 위한 지원을 통한 자립적 발전을 목표)을 규정한 개발협력헌장을 승인하였고, 개발협력헌장에 보건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은 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5)).

G7 국가들이 이세시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G7 이세시마 국제 보건 비전 이행을 발전시키고, SDG 3 및 기타 SDG의 달성에 기여한다. G7 이세시마 국제 보건 비전은 건강은 경제 번영과 안보의 토대임을 강조하며, G7 국가들은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홍보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항균저항(AMR)에 대한 대응 강화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연구개발(R&D) 촉진과 이들과 기타 보건 분야의 혁신을 강조하였다 (G7, 2016). UHC는 2016년 5월 일본 이세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세계적인 건강 목표로 부각됐다(Kato, 2017).

#### **국제보건 제도 및 관련 시스템 강화에 대한 기여**

공공 의료 비상사태에 대한 긴급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 보건 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서 시스템 강화에 기여한다.

#### **WHO 긴급대응단 강화 및 조직 긴급대응활동 지원**

CFE(Contingency Fund for Emergencies<sup>5)</sup>)에 재정적인 기여를 하여 긴급 상황과 전염성 WHO 질병의 발생 시 초기대응을 개선한다. 건강 위험 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전 세계 각국의 공중 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과 준비에 기여한다.

#### **세계은행,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응 강화 PEF 지원**

세계은행은 The Pandemic Emergency Facility (PEF)이라고 불리는 금융 메커니즘을 시작했는데, PEF는 보험 상품을 활용하여 전염병에 대응한 재정자원

---

5) 세계보건기구(WHO)는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사태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대응과 건강 및 인도주의적 결과가 수반되는 긴급 상황에서의 WHO 업무개혁의 한 요소로 2015년 5월 설립됐다 (WHO, 2017).

을 적시에 지출하기 위한 자금 메커니즘이다. 일본은 2016년 5월 세계은행과 제휴해 이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데 적극 참여했고, 일본은 다른 나라보다 먼저 기여를 했으며, PEF의 주요 기부자로서 공공 의료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재정적인 기여를 하고 적절한 PEF 관리를 수행한다.

### 세계은행과 협력하여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UHC 추진 및 대비 강화

일본 정부와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는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UHC의 가속화와 개발도상국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 및 예방 강화를 위해 'UHC in Africa'를 라는 이름의 액션 정책 프레임워크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6차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VI<sup>6</sup>) 중에 일본 브랜드의 하나로 발표했다(Kato, 2017).

## 5) 개도국 아시아 내 고령화 문제 해결

SDGs 추진 본부(SDGs Promotion Headquarters, 2017)가 배포한 SDGs 이행 가이드 원칙에 따르면 일본은 2016년 장기요양 및 의료에 대한 일본인의 지식과 전문지식을 제공함으로써 UHC의 실현을 통해 새로운 아시아를 구축하기 위한 아시아 건강과 증진 이니셔티브(The Asia Health and Wellbeing Initiative, 이하 AHWIN)를 출범시켰다. AHWIN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고령화와 관련된 광범위한 중요 이슈에 대한 이해와 정책을 알리기 위해 보다 강력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AHWIN의 후원과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

6) UN에 따르면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frican Development (TICAD)는 일본 정부가 다자간 협력과 협력, 특히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아프리카의 발전, 평화,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1993년에 발족되었다.

(<https://www.un.org/en/africa/osaa/partnerships/ticad.shtml>)

for ASEAN and East Asia)의 감독 하에 지역 주변의 연구자와 기관이 많은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AHWIN은 아시아 건강과 증진 이니셔티브 추진 실무 그룹(Asia Health and Wellbeing Initiative Promotion Working Group)과 내각관방 내 의료정책본부 등을 포함한 일본 정부와 해외 파트너 국가 및 조직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부문 및 기타 일본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부문 컨소시엄과 협력으로 구성된 일본 자민당 내 국제보건 전략특별위원회이 주도하고 있다(Asia Health and Wellbeing Initiative,2018).

### 3.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 현황

#### 가. 한국의 SDG3 이행 성적

표7. 한국의 SDG3 지표별 이행 성적

SDG3 (보건의료) 지표	이행 성적	
	2017	2018
3.1.1 산모 사망률(MMR)	녹색	녹색
3.2.2 신생아 사망률	녹색	녹색
3.2.1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녹색	녹색
3.3.2 TB(결핵) 발병건수 (10만명당)	빨간색	빨간색
HIV 유병률 (천명당)	녹색	녹색
3.4.1 (30-70세 사이의 연령 표준화 된) 심혈관계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10만 명당)	녹색	녹색
3.9.1 집 그리고 집 주변의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연령표준화, 10만명당)	녹색	녹색
3.6.1 도로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한 사망률 (10만명당)	노란색	노란색
출산 시 건강기대수명 (년)	녹색	녹색
청소년 출산율 (15-19세 사이의 여성청소년 1000명당)	녹색	녹색
3.1.2 숙련된 보건인력이 진료에 참여한 출산의 비율	자료없음	녹색
WHO가 추천한 2개의 백신을 맞은 영아의 생존율 (%)	녹색	녹색
보편적 건강보장 추적지표 (Universal Health Coverage Tracer Index) (0-100)	녹색	녹색
주관적 웰빙 (0-100)	녹색	노란색
출산 시 기대수명 지역 간 격차 (Gap in life expectancy at birth among regions) (년)	녹색	녹색
자기보고 건강상태 소득 간 격차 (Gap in self-reported health by income) (0-100)	녹색	녹색
3.a.1 15세 이상 인구 중 흡연율	녹색	녹색

출처: Sachs et al. (2017,2018)

한국의 SDG3 이행 성적도 대체적으로 SDG3 달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결핵,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주관적 웰빙이 해결 과제이다. 특히, 결핵은 특정연도 기준 (HIV에 감염된 사람의 경우를 포함) 모든 형태의 결핵 신규



및 재발 예상 환자 비율이 2017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80명에서 2018년은 77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결핵예방과 관리에 대한 큰 노력이 필요하다(Sachs et al., 2017,2018).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2017년과 2018년 모두 12%였고, 삶에 대한 주관적 자아평가로 나타난 주관적 웰빙은 2017년 6에서 2018년 5.9로 낮아졌다(Sachs et al., 2017,2018). 따라서 교통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정신적 건강증진에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의 경우 VNR에는 SDG와 관련이 있는 보건정책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국제보건사업의 기반이 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장에서는 일본의 국가단위의 SDG 계획인 8가지 우선순위에 대응하는 환경부가 보건 분야를 포함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수립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K-SDGs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 나.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K-SDGs

### 1)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목표 (2) 통합된 안심사회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SDG3 관련 보건 정책은 목표2. 통합된 안심사회의 4개의 전략 중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이며, 5개의 세부 이행과제로 1)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2) 어린이 건강증진 3) 감염병에 대한 예방 관리 강화 4) 식품안정성 및 식량안보 제고 5) 휴양 치유 인프라 확충이 있다. 이행과제에 대한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환경부,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다양한 이해관계부서들이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관계

부처합동, 201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속의 SDG를 반영한 보건관련 세부 이행과제들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관계부처합동, 2016).

###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 대한 소관 부처는 환경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이다. 환경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는 SDGs 세부목표 3.9 (2030년 까지 유해화학물질, 대기수질, 토양의 공해와 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건수를 상당수준으로 감소)를 반영하였고, 이를 위해 환경관련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및 감시를 강화하고 환경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질환을 환경성질환으로 재분류하고 대응대책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지표로는 환경기준 설정 물질수이다.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질환 같은 비감염성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보건소의 기능을 질병예방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이는 SDGs 세부목표 3.4 (2030년까지 예방 및 치료를 통해 비감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1/3만큼 감소시키고 정신건강 및 웰빙을 증진)와 유사하다. 또한, 영양섭취의 균형성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한 나트륨일일 섭취량을 지표로 나트륨당류 과잉섭취 저감화 추진할 계획이다.

### 어린이 건강증진

어린이 건강증진에 대한 과제는 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담당한다. 먼저, 영유아 건강관리를 강화하기위해 모성건강과 연계한 산전관리 강화와 신생아 집중치료실 최소 300명상 이상 확충, 고위험 영유아 장애발생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 및 의료비 비용부담 완화, 모유수유 실천향상 및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등 영유아 성장발달 및 건강증진 도모와 시각장애요인 조기 발견 및 후천적 시각장애율 감소를 위한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기 시력 검

진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SDG 3.2 (신생아 및 만 5세미만 아동의 예방 가능한 사망 종식)과 유사하다. 태아 시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유해환경노출인과 건강영향에 대하여 장기간 추적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산모태아기, 성장기별 건강영향 분석을 토대로 환경보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어린이 환경보건 조사를 체계화하기로 하였다.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개선과 어린이 용품 내 환경유해인자 관리 강화를 통해 어린이들의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지표로는 영아사망률, 고위험 신생아 의료비 지원율 (%), 어린이 환경보건 코호트 참여 산모 수와 어린이 아토피 질환 환자 수 (만 명) 이다.

#### **감염병 관리 강화**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과제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신종 감염병의 국내유입 차단과 초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24시간 긴급 상황실 운영 등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계획하였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방역체계 컨트롤타워 개편 등의 신종 감염병 거버넌스 개편을 이행과제로 포함하였다. 이는 SDGs 세부목표 3.3 (2030년까지 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소외 열대성 질환 등 감염병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감염성 질병 방지)를 반영한 이행과제라고 본다. 이에 대한 지표는 긴급 상황실 운영이다.

#### **2) K-SDGs: 목표 3. 모든 연령대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국가 지속가능개발목표(K-SDGs)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목표들보다 2030 아젠다를 많이 반영하였고 좀 더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였다. 현 정부의 주도하에 새롭게 수립되었기 때문에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

내의 보건의료분야 관련 정책을 포함시켰고,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달리 새롭게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고령화와 초저출산,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심화로 인한 질환 대비, 만성 질환의 위험요인관리와 건강보장 확대 목표를 추가하였다(환경부, 2018).

만성질환의 위험요인 관리와 건강보장 확대 목표에 대한 지표로는 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 질환 또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 (15~64세 인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근거하는 당뇨병 조절률 (%), 성인 남성 흡연율 (%)과 장애인 건강권확보가 수립되었다. 이에 대한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다. SDG3 이행 성과에 개선되어야 할 목표로 나타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사고 등 각종 인명사고로 인한 사망과 신체소상을 예방이 목표로 수립되었고, 이에 대한 소관부처로 국토교통부가 담당한다. 또한, 높은 결핵 발생율에 대한 대처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노력을 목표로 수립하여, 결핵발생율을 2017년 인구 10만명당 70명에서 18명으로 목표를 세웠다(환경부, 2018).

현재 한국의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 문제인 고령화에 대비하여 대한민국의 저출생극복과 인구고령화 대비를 목표로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함께 소관부처로 담당한다. SDG3에서 중요시 하는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are)를 반영하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 또한 새롭게 포함되었다. 또한, 음주나 흡연으로 인한 사망 및 비감염성 질환 등의 예방을 중요 정책과제로 포함시켜 SDG3.4 (비감염성 질병으로 조기사망률 감소 및 정신건강과 웰빙 증진)와 SDG 3.a (WHO의 담배 규제 기본협약 이행 강화)를 반영하였다 (환경부, 2018).

## 다. 국내 보건의료 관련 정책 현황

### 1) 국정과제

현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관련 국정과제에는 SDG3와 연관성이 높은 정책들이 수립되어 있다. 먼저, 42번째 국정과제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제시하며,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등의 의료지원 확대를 포함하며,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율 향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격차 해소를 기대한다. 이 과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 것과 연관 지을 수 있다 (대한민국정부, 2017).

44번째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은 SDG 3.8과 연관이 있는데, 건강보험 보장강화를 위해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및 실폐괄수가 확대 추진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에 대한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평가소득 폐지,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부담 강화 등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서민부담 경감 및 형평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 취약지역에 300병상 이상의 거점 종합병원 확충을 계획하였다. 또한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전용헬기와 소아 전문 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가 수립되었고,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의 또 다른 감염병 발생을 막

기 위해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가 과제로 수립되었다 (대한민국정부, 2017).

## 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한국의 VNR에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한국의 대내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국가 건강정책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근거해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으며, 현재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6~2020, 이하 HP 2020)을 수행 중이다 (양성일, 2017).

HP 2020의 비전은 “은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으로, 포괄적 건강의 정의와 건강증진의 기본이념을 적용하여, 국민 모두가 건강과 장수를 누리는 사회의 구축을 위해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형평성의 제고를 목표로 추구하였다(보건복지부, 2015). 이는, SDG3 목표 (모든 연령대의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와 일치한다고 본다. HP 2020에서는 제3차 종합계획에서 미흡하게 평가되었던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격차 완화를 위해 건강형평성을 제고를 위한 건강격차 모니터링 지표 및 전략 강화, 사전예방 중심 평생 건강관리 전략 강화, 건강 환경 조성 및 건강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수립 방향을 설정하였다.

주요 중점과제로는 제3차 종합계획 사업 분야를 기반으로, 건강생활 실천 확산, 예방중심의 상병관리, 안전 환경 보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분야 등 6개 분야, 27개 과제로 선정하였다(보건복지부, 2015).

표8.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관련 SDG3 세부목표
사업 분야	건강 생활실천 ·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SDG 3.5, 3.a
	만성퇴행성질환과 발병위험요인관리 · 암, 건강검진, 관절염, 심뇌혈관질환, 비만, 정신건강, 구강건강	SDG 3.4
	감염질환관리 · 예방접종, 비상방역체계, 의료관련감염, 결핵, 에이즈	SDG 3.3, 3.8
	안전환경보건 · 식품안전, 손상예방	SDG 3.9
	인구집단 건강관리 · 모성건강, 영유아건강, 노인건강, 근로자 건강증진, 군인건강증진, 학교보건, 취약가정건강, 장애인건강	SDG 3.1, 3.2

출처: 보건복지부 (2015)

## 라. SDG와 한국의 국제보건사업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나 K-SDGs에는 국제사회를 위한 한국의 보건 사업이 이행과제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까지 개발도상국가에서 다양한 국제보건 사업을 진행해왔고, 한국의 국제보건사업은 국제협력 사업의 한 분야로써 이행되어 왔다. 한국의 VNR에 보고된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협력사업인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를 바탕으로 한국의 SDGs 초기 이행과정 중 이행되어 온 국제보건 사업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1)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 시행 계획

ODA정책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정책 일관성 및 원조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기반으로 UN의 SDGs와 같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한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과 세부적인 계획을 담은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 있다.

국제 사회의 새로운 목표로 SDGs가 제시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에도 SDGs를 수용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2차 기본계획의 개발협력 4대 구상에 포함된 보건 분야는 교통, 수자원, 교육과 같이 중점 사업으로 재원지원을 받게 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5).

20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주요추진과제로 개발협력 구상의 차질 없는 시행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2015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이 UN 개발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개도국 소녀들을 위해 보건 교육 ODA 사업인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을 2016년도에 공식 출범시키고 향후 5년간 2억 불을 지원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전 부처 소관의 과제가 되었다(서경, 2016).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는 보건 분야의 재정적 지원이 교통 분야 다음으로의 중심 지원 분야로 비중이 늘어났고, 16년도 시행과제였던 개발협력 구상의 차질 없는 추진의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과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은 우선과제로 이행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6).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의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코트디부아르 여성특화질병 치료예방 사업과 파크스탄 아동병원 건립과 베트남 산부인과병원 의료기자재 공급 사업을 계획하



였다.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의 2017년도 계획은 UNICEF등 국제기구 지원을 통합 예방접종 및 백신공급 사업협력, 보건의료인력 전문가 양성 초령연수와 캄보디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등이 계획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6).

## 2) 소녀를 위한 보다 나은 삶 (The Better Life for Girls Initiative)

소녀들을 위한 보다 나은 삶 이니셔티브는 코트디부아르, 필리핀, 우간다 등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2억불 지원을 계획하였고, 시행부처로는 국무 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코이카를 포함한 외교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의 연관 사업을 담당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6). 개발도상국 소녀들의 교육 및 보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기에는 SDG 3, 4, 5가 관련이 있다.

크게 소녀들의 교육받을 권리, 건강해질 권리, 직업을 가질 권리 등의 3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학습 성과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소외된 그룹을 위한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강해질 권리를 위해 소녀들을 위한 건강한 학교를 지원하고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학생들을 위한 보건학교는 생활능력 기반 성교육 강화와 학교 위생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는 지역사회의 성 인식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직업에 대한 소녀의 권리는 능력을 함양하고, 일을 위한 전문적 기술과 그리고 권한을 부여하는 생활기술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 목적은 여학생들을 위한 기술 및 직업교육과 훈련을 위한 동등한 기회를 촉진하는 것이다(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 3)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The Safe Life for All Initiative)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이니셔티브는 안전한 세상을 보장하기 위한 한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2015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 보건 안보 의제 고위급 회의(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를 계기로 향후 5년간 개도국에 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문종현, 이규홍, 2016). 시행부처로는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를 포함한 기획재정부, 한국국제협력단(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를 포함한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관계부처합동, 2016).

이니셔티브는 모든 형태의 전염병에 대한 종식에 대한 SDG 세부목표 3.3을 직접적으로 다룬다. ‘2016년도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우즈베키스탄 등을 대상으로 국가실험실체계 강화 등 국가 감염병 예방 대응 체계 강화 추진과 거점 협력국 시스템 및 역량 강화 등 단계적 추진 및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 공여국 및 WHO와 같은 국제보건기구와의 공조체계 구축을 계획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5).

## IV.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 향상방안

### 1.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조직의 개선

우리나라의 SDGs 이행을 담당하는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은 2000년도에 설립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환경부 산하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외교부를 포함한 부처 급의 정부기관들이 SDGs 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SDGs와 같은 종합적인 목표를 부처 1개가 총괄하기에는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이행의 어려움이 있어보였다.

먼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주체가 환경부 이다 보니 기본 계획 내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주요 사업들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 강화 등의 환경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 사업들이었다. 반면에 SDG Dashboards에서 나타난 한국의 SDG3 이행 성적에는 결핵,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시급한 개선과제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7년 OECD에 가입한 35개국 가운데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은 1위를 기록했으며 약제내성 결핵환자 환자발생률은 3위를 기록할 정도로 결핵에 대한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김희애 등, 2017). 하지만, 제3차 지속가능개발 기본계획에는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차단과 초기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24시간 긴급 상황실 운영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는 등 결핵 예방에 다소 적절치 못한 대책을 수립한 것 같다.

또한, SDG3에는 한국인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만한 목표들이 있는데, 이를 잘 적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예를 들어, SDG 3.5 (마약 및 알코올의 해로운 사용을 포함한 양물남용 예방 및 치료 강화)와 SDG 3.a (모든 국가에서 WHO의 담배규제 기본협약 이행 강화)는 한국의 음주 및 흡연이 주요 원인으로 발생하는 비감염성 질환들을 감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사이의 협력이 긴밀하지 못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부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였는지 의심이 들었으며 환경부의 총괄로서의 역할이 미약하다고 보았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경우 초기에는 대통령직속기구로 출범하여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를 직접 관장하는 국정과제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지만, 선거의 결과에 따라 정부가 바뀌면서 환경부 산하의 환경부장관 자문기구로 축소되었다.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통령 직속으로 지속가능위원회를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지만 위원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며 당장의 정책 추진에 장애물이 있어 무산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같은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책의 결정 및 수립의 권한이 없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재수립된 K-SDG에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이행하려는 보건과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아마도 이는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국가의 주체는 환경부이기 때문이고, 국가의 국제보건 사업은 국제협력사업으로 구분되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범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김태균, 김보경, 심예리, 2016)

일본과 같이 나라의 수장이 조직의 장(長)으로서 SDG 이행을 지휘한다면 부처 간 협력이 도모되고 부처 간의 이행 정책들의 대한 연계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선거의 결과에 따라 매년 변화를 겪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 환경부와 같은 부처가 계속 이행하는 것이 적절한 듯하다. 하지만, 정책적 연계성에 있어서는 모든 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꼭 필요해 보인다. 그러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환경부 산하의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와 총리 산하의 녹색성장위원회 그리고 ODA를 담당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등의 조직들을 통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2.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정책의 일관성 유지

한국의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한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적 계획이다. 하지만,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만 2년 만에 국가 지속가능개발목표로 재수립되었다. 물론, K-SDGs로 변경이 되면서 고령화, 저출산과 기후변화 등의 국내 여건을 고려하였고,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를 많이 반영하는 등의 개선점은 있었다. 하지만, 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이행이 요구되기에, 선거의 결과에 따라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을 위한 국가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이행의 큰 걸림돌이라고 본다.

일본의 SDGs 이행 가이드 원칙은 SDGs를 부처 및 하위 정부 기관의 계획, 전략 및 정책에 통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8개의 우선순위 영역

은 2030 아젠다를 일본의 대내외적 상황에 맞춰 일본이 해결해야할 이행 과제를 SDG 이행 가이드 원칙을 따라 수립하였기에 모든 분야의 정책과 이행 사업이 일관성을 띤다. 예를 들어, SDGs 이행가이드 원칙의 목표인 ‘SDGs 달성을 위한 이행에서 세계의 롤모델이 되는 것’은 일본의 8개의 우선순위 영역 중 보건의료분야(개발도상국의 보건 분야 강화 와 고령화 문제 해결)에서도 나타났다.

현재 선거의 결과에 따라 국가계획이 변경되는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에서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 목표의 이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후 SDGs 이행을 위한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각 부처별 기존 정책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최종 환경부가 발표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각 부처별로 SDGs 이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처 별로 수립한 정책을 보면 국내외 상황에 대한 부처 별 전문성은 물론 SDG도 반영되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는 SDG3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들이 두루 수립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인의 건강문제에 대한 세부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 회의를 거듭하고 새로운 정책을 찾기보단 기존의 수립된 정책들을 사용하는 것이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이행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행정적 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3. 문재인케어(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K-SDGs에 적용

일본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성적을 비교해보면, 양국이 모두 대체로 SDG3 달성에 가까운 우수한 편에 속한다. 양국의 큰 차이는 일본은 국제보건 사업이 주요 이행과제로 수립된 반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이나 K-SDGs 에는 국제보건 사업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일본의 8개의 우선순위 영역의 보건의료관련 목표의 특징은 SDG3의 주요 목표인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강화와 전염성 질환에 대한 대책을 일본이 이행해야할 주요과제로 수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 일본이 세계보건기구 및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와 함께 해온 국제보건사업과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이행과제를 포함시키는 등 국제기구 및 주변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정책들이 돋보였다. 이것은 국제보건을 외교 전략으로 사용하는 일본이 SDG3의 이행을 외교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SDGs 이행 가이드 원칙에도 나타났듯이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의 리더로 활약을 하고자 함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또한 SDG3 목표가 성취에 가까울 만큼 우수한 건강시스템을 자랑하기 때문에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K-SDGs에는 국제보건 관련 이행과제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국제보건 사업은 ODA 사업의 부분으로서 진행되기 때문에, K-SDGs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연관성이 높지 않아 하나의 이행으로 보기가 어렵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K-SDGs에도 포함되어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비감염성 질환 관리 등은 현재 국제보건 아젠다의 주요 사항이다. K-SDGs에 수립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확대는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것인데, 여기에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전 국민 건강보험 보장 경험을 사용하는 과제를 추가한다면 개발도상국의 보편적 의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K-SDGs에 포함시켜 이행한다면 국내외 상황에 대한 통합적인 이행 조치가 되며, 우리나라도 일본 못지않은 국제보건의 리더로써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4. 지속가능개발 목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 추진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 정부와 아베신조 총리는 SDG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SDG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러한 높은 관심 덕분에 일본의 SDG는 이행 초기 단계부터 총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범정부적 이행 조직을 수립할 수 있었다. 한국은 MDGs 시대를 이끌었던 UN 반기문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이며, SDGs 초기에 UN 경제사회이사회 의장국으로서 SDGs 이행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한때 대선 후보로 거론되었던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국내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함인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일본에 비해 SDGs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다.

일본은 아베신조 총리가 SDG 채택을 선언한 UN 회의에 참석하여 SDGs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SDGs의 시작 전부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 준비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SDGs 추진 본부가 오직 일본의 지속가



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국민들에게 SDG에 대해 알리기 위한 홍보 및 교육에도 적극적이다. 일본은 초기 이행부터 SDGs 추진본부가 비정부기구(NGOs), 대학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원탁회의를 통해 이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아베 총리가 직접 수여하는 SDG 어워드를 창설하여 민간 기업의 SDG 이행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SDGs가 이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2018년에 들어서 한국도 일본처럼 환경부가 시민단체, 정부 및 공공기관과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K-SDGs 민간 작업반과 민간 및 일반국민들로 구성된 K-SDGs 이해관계자 그룹을 구성하여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SDGs 이행에 참여시키려 노력하는 점들은 이행 초기보다 개선해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이행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SDGs와 같은 복합적인 아젠다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만의 노력으로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비정부기관들, 즉 시민사회단체, 학계, 재계, 국회와의 연대를 꾀하는 정책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김태균, 김보경, 심예리, 2016). 우리나라는 SDGs 이행을 통해서 현재 한국의 경제, 사회, 환경을 통틀어 전반적인 국가 점검을 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지속가능한 국가로서 발전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도 G20국가이며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위치 수준에 맞게 SDG 이행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 V. 고찰 및 결론

### 1. 고찰

이 연구에서는 국가들의 SDG 이행을 다룬 기존 연구들과 달리, 한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이행 현황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관련 지속가능개발 목표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일본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SDG3 이행 현황을 비교하였다는 점에서의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SDGs 이행에 대한 비교 분석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교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분석들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평가 지표들을 선정함에 있어 전문가와 면담한다든가 델파이 기법의 방식을 활용 하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평가 지표를 선정하는 자체가 별도의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행하기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과정은 과감히 생략하였다. 다만 연구자가 SDG 이행에 평가가 되는 거버넌스 항목을 현재 SDG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를 살펴본 뒤, 이 연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임의로 마련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들이 보완되어야 하겠다.

둘째, 일본의 SDG 국가전략 수립과정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일본의 SDG 이행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률을 마련하였고, 그러한 법률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았어야 하나, 연구자가 일본 법체계 등에 대해

생소하여 이러한 부분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였다. 추후 일본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부분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한국의 SDG 이행 과정에서 왜 이행의 차이가 발생하였나에 관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차이에 대한 원인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조사할 때 문헌이나 인터넷 자료 조사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 들을 만나 심층면접을 수행하는 방식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 2. 결론

이 연구에서는 SDGs이행의 중요성을 이론적 배경으로 서론에서 살펴보았고,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사용하였다. 먼저, SDGs의 이행 현황을 UN과 관련 기관들이 제시한 SDGs 이행 모니터링 항목을 기준으로 일본과 한국의 SDGs 이행현황(조직, 여러 이해관계자의 참여, SDGs 반영 국가 정책, 제도 및 체제)을 비교하였다.

표 9. 일본과 한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비교

	일본	한국
SDGs 추진 및 이행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리 주재, 범 정부조직</li> <li>정기적인 회의를 통한 의사결정 수립</li> <li>넓은 참여자 범위</li> <li>의견 교환 및 협력을 촉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발전위원회</li> <li>환경부산하의 위원회</li> <li>모니터링과 자문의 역할</li> <li>정부기관</li> <li>각 부처별 이행</li> </ul>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단체와 민간의 참여</li> <li>기업의 참여 장려</li> <li>국민 대상 홍보 교육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사회단체 개별 활동</li> <li>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계획 수립과 이행</li> </ul>
SDGs를 반영한 국가 전략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의 리더 역할 모델을 목표</li> <li>국내외 통합형 전략</li> <li>이행 우선순위 선별</li> <li>2030 아젠다와 높은 연계성</li> <li>장기적인계획 (2016-20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li> <li>환경 중심의 국내 상황을 구현</li> <li>5년 또는 정권의 변화 시 계획 재수립</li> <li>계획을 기반으로 각 부처에서 세부조치 개별적 수립</li> <li>SDG 연관성 높은 국정과제</li> </ul>
SDGS 이행을 위한 제도 및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DGS 이행 가이드 원칙에 근거</li> <li>모든 부처와 정부기관을 동원</li> <li>총리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거의 결과에 따라 바뀜</li> <li>부처 별 개별 이행으로 부처 간 협력을 높이 요구</li> </ul>

일본과 한국의 보건의료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한 현황을 양 국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비교해보았다.

표 10. 일본과 한국의 보건의료 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 비교

일본 (8개의 우선순위 영역)	한국
	<b>※ 지속가능기본발전 기본계획※</b>
1) 모든 사람들의 권한부여 - 모든 시민의 역동적인 참여 실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 건강일본 21)	2) 통합된 안심사회 -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 강화,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충, 신종 감염병 유입 24시간 긴급 상황실 운영, 신종감염병 거버넌스 개편)
SDG 3.5, 3.a	SDG 3.2, 3.3, 3.4
	<b>※국가 지속가능개발목표 (K-SDGs)※</b>
2) 건강과 장수성취 (B/C형 간염 종합대책 추진, 암 관리) - 항균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항균제 내성에 대한 국가 조치계획의 이행) - 개발도상국 보건 분야 강화 및 공공보건과 전염성 질환에 대한 대책 향상 (국제보건 제도 및 관련 시스템 강화, CFE 지원, PEF 지원 UHC in Africa) - 아시아 내 고령화 문제 해결 (아시아 건강과 증진 이니셔티브)	3) 모든 연령대에서 건강한 삶과 웰빙 보장 - 만성질환 위험요인 관리와 건강보장 확대 - 정신건강 증진, 약물 오남용 예방 - (교통사고)각종인명사고 사망 예방 - 감염병 예방과 관리 - 모성건강 증진 - 아동건강 증진 -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 감소 - 저출생 극복과 고령화 대비 -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대 (보편적 의료 보장 달성)
SDG 3.3, 3.4, 3.8, 3.c, 3.d	SDG 3.1, 3.3, 3.4, 3.5, 3.6, 3.7, 3.8, 3.9, 3.a

출처: Japan the SDG Implementation Guiding Principles (2016),  
 관계부처합동 (2016, 2018).

이 연구의 결과 한국의 SDGs의 이행 수준은 출발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SDG3 이행에 어떠한 부분이 보완 및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정상이 참여하는 조직에서 SDGs 이행을 컨트롤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정부는 SDGs 이행 추진에 대해서 환경부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제3차 지속가능개발 기본계획내의 보건의료분야는 환경부의 전문분야인 환경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건강관리 등을 수립하는 등 국내의 시급한 건강문제나 SDG3 목표들을 반영치 못하였다. 이 점은 환경부 같은 단일 부처가 SDGs를 총괄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SDG에 대한 정책수립과 이행조직은 환경부인데 반해 VNR 제출과 UN의 공식 SDG 지식플랫폼 상의 한국의 SDG 이행에 대한 주요 연락처는 외교부로 역할이 분담 되어있어 SDG 이행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위해 부처 간의 협력과 협의를 조정해줄 상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지속가능개발위원회와 같은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여 통합된 SDG 이행을 위한 조직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둘째, 일본의 SDGs 이행에 대한 국가전략인 SDGs 이행 가이드 원칙을 기초로 한 8개의 우선순위 영역은 일본의 국내외 상황에 맞춰 수립된 통합적인 국가정책이다. SDG 달성을 위한 세계의 SDGs 이행 모델이 되고자 하는 일본의 야심은 SDGs 이행 가이드 원칙에 반영되었고, 이는 8개의 우선순위 영역의 건강정책에도 드러났다. 반면에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정권에 변화에 따라 변경이 되었기에 2016부터 2030년까지의 일관성 있는 장기적 이행이 요구되는 SDGs에 적합할지 의문이다. 한국의 국내이행과 국외이행이 개별적으로 이행되는 관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내의 국제보건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은 일본에 비해 한국의 SDGs 이행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은 낮은 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장기적인 SDG 이행을 위해 선거의 결과에 따라 매년 새로운 SDG 이행 국가 정책을 세우기보다는, 각 부처에서 국내외 상황을 잘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수립하는 기존의 정책을 SDGs 이행에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 일본의 대부분의 SDG3관련 보건의료정책은 일본의 경험을 기반으로 일본이 국제보건의 리더로서 개발도상국에 기여하고자 함과 WHO와 같은 국제기구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CFE나 PEF 등의 국제협력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G7과 같은 정상급 회의에서 논의된 아젠다를 반영하여 SDG3 이행을 일본의 외교도구로서 활용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일본 못지않은 전 국민 의료보장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인 문재인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SDG3의 주요과제인 UHC 확립과 연관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SDG3 이행에 있어 현재의 국가 지속가능개발 목표에 국제사회를 위한 문재인케어를 적용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넷째, 우리나라는 G20 국가이며 국제사회 조직의 리더를 배출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공동의 과제인 SDGs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일본은 SDGs 추진 본부의 구성부터 SDG 이행 가이드 원칙 수립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진행하였고,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SDGs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SDGs는 국가적인 범위의 과제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없이는 이행이 어렵다.

## 참고문헌

### 국내자료 (가나다순)

- 관계부처합동. 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15
- 관계부처합동.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16.
- 관계부처합동.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경과 및 세부목표 지표 체계(안). 2018.
- 관계부처합동.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5.
- 관계부처합동.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2016
- 고재만. 녹색성장위, 탈원전 인사 대거 포진. 매일경제뉴스. 20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속가능발전법. 2015.
- 국무조정실. 정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16~20) 확정. 보도자료 2015.
- 김성욱, 이병량. 녹색성장위원회의 조직기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조 직학 회보, 2010; 7(1), 119-150.
- 김태균, 김보경, 심예리. 국제개발 규범의 국내화 과정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 연구, 2016: 81-125
- 김호석. 국가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개발. 수시연구보고서. 2017;1-78.
- 대한민국정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2017.
- 문종현, 이규홍.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국제개발협력.(4)97-110.
- 박근혜. [전문] 박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 한겨레 신문. 2015.09.29.
- 서경.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과 보건. 국제개발협력.2016 (1) 45-61
- 양성일, Yang S. 한국의 보건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과 향후계획. J



Korean Med Assoc. 2017 Aug;60(8):640-653.

이벽규. 환경부 거버넌스의 평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를 중심으로. NGO연구, 2014: 67-104

이연호. 지속가능발전정책 거버넌스의 평가. 동서연구, 2010: 1-40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2013.

최재욱. 국제연합의 보건의료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우리나라 의료계의 과제. 대한의사협회지. 2017.08; 60(8):628-631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 보건복지부, 2015.

홍은경. 국가별 SDGs 이행전략 및 프로그램- 일본. 개발과 이슈. 2018; (42): 1-27.

환경부. 정부,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보도자료. 2016.

환경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정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2018

### 국외자료 (abc순)

Abbott, K. W. and Bernstein, S.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Orchestration by Default and Design. Glob Policy, 2015; 6: 222-233.

Abe S. Japan' s Vision for A Peaceful and Healthier World. Lancet 2015; 386:2367-8

Bexell M., Jönsson K. Country Reporting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The Politics of Performance Review at the Global-National Nexus,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2018

-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SA) United Nations. Handbook For the Preparation of Voluntary National Reviews, The2019 Edition. Oct 2018.
- G7, G7 Ise-Shima Leaders' Declar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6.
- Kato H. Japan and Africa: A Historical Review of Interaction and Future Prospects, *Asia-Pacific Review*, 2017; 24:1, 95-115
- Kitaoka 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Human Security, National Interest, and a More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Asia-Pacific Review*, 2016; 23:1, 32-41.
- Kroll C.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re the rich countries ready? [Internet].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Japan' s Efforts to Mainstream the 2030 Agenda in National Context. 2017.
- Ministry of Foreign Affaires. JAPAN The SDGs Implementation Guiding Principles. March 2017.
- Palmer E. Introduction: The 2030 Agenda, *Journal of Global Ethics*, 2015; 11:3, 262-269.
- Reich MR, Takemi K. G8 and Strengthening of Health Systems: Follow-Up to the Toyako Summit. *Lancet* 2009; 373:508-15.
- Sachs J. From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o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ancet* 2012; 379:2206-11.
- Sachs, J., Schmidt-Traub, G., Kroll, C., Durand-Delacre, D. and Teksoz, K. (2016): An SDG Index and Dashboards - Global Report. New York:

- Bertelsmann Stiftu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 Sachs, J., Schmidt-Traub, G., Kroll, C., Durand-Delacre, D. and Teksoz, K. (2017): SDG Index and Dashboards Report 2017. New York: Bertelsmann Stiftu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 Sachs, J., Schmidt-Traub, G., Kroll, C., Lafortune, G., Fuller, G. (2018): SDG Index and Dashboards Report 2018. New York: Bertelsmann Stiftu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 Schwab K, editor.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 2018.
- SDGs Promotion Headquarters (Japan). Japan's Voluntary National Review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7.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 Stafford-Smith M, Griggs D, Gaffney O, Ullah F, Reyers B, Kanie N, et al. Integration: the key to implemen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ustainability Science. 2016;12(6):911-9.
-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Year One of Implementing the SDGs in the Republic of Korea: From a Model of Development Success to a 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6.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 UN DESA.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5, UN, New York. 2016.
- UN.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ited Nations, New York (2015)
- World Health Organization. Contingency fund for emergencies: enabling

quick action to save live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 인터넷자료

Approval of Basic Design for Peace and Health (Global Cooper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The Headquarters for Healthcare Policy; 2015.[cited2019Apr13].Available from:  
[https://www.mofa.go.jp/ic/ghp/page22e\\_000761.html](https://www.mofa.go.jp/ic/ghp/page22e_000761.html)

Asia Health and Wellbeing Initiative. About Asia Health and Wellbeing Initiative.[cited2019Apr13]. Available from:  
<https://www.ahwin.org/about>

World Bank. 2016. 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in Africa : a framework for action : Main report (English). Washington, D.C. : World Bank Group.[cited 2019 Apr 13] Available from: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735071472096342073/Main-report>

World Bank. About PEF.[cited on 2019 Jun 01] Available from :  
<http://www.worldbank.org/en/topic/pandemics/brief/pandemic-emergency-financing-facility>

World Economic Forum. World Economic Forum; 2018 [cited 2019Jun7]. Available from: <https://www.weforum.org/reports/the-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8>

= Abstract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DG3 Governance in Korea:

-Comparison with the case of Japan

Yoon Ah Choi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o-Yoon Kim, M.D., Ph.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re launched in January 2016 and are global task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economy, society and environment around the world from 2016 to 2030. SDGs call for efforts at the national level and implementation of SDGs has been critical because not only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advanced

countries must work together to resolve them.

Korea submitted the Voluntary National Review to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 in 2016 for global-level monitoring of SDGs implementation. According to the data by SDG Index & Dashboards Report, which is an assess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SDGs by country, South Korea's index ranking in implementing SDGs is in the mid-tier range. Meanwhile, Japan's SDG Index world ranking is higher than Korea's., but has a similar political and social system to Korea. In addition, the health systems for all citizens, such as Universal Health Coverage, and welfare policies to cope with aging societies, are similar to those of Korea. Thus, Japan's initial implementation case of SDGs will be of much help to improve Korea's SDGs governance in the future. Also, I hope to find how Korea can contribute to the global health community by implementing SDGs while examining two countries' national health strategy and policy which are associated with SDG3.

Therefore, this study looked at how well Korea's SDGs implementation was performed in comparison with the Japanese case and compared how well the policies of the two countries on the health sector reflected SDG3.

To carry out this study, the research method presented here is a literature review. I compared SDGs implementation system based on the detailed objective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2030 Agenda of

the United Nations, the governance questions required by the VNR, and the governance survey questions asked by the 2018 SDG Index & Dashboar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il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plays a central role to implement SDGs in Korea, the national health and medical targets in the Third Basic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ailed to properly reflec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or 2030 Agenda, and failed to establish appropriate measures for health and medical issues at home and abroad.

Second, Korea's The Third Basic Plan has changed two years after its implementation, and this prevents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SDG for a long period of time until 2030. Also, Korea's implementation of SDGs is inconsistent as a country's policy because they are divided in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sectors and each ministry in charge establishes and implements policies.

Third, Korea also has a health care system for all citizens like Japan. The Moon Jae In Care (Strengthening Health Insurance Coverage) is one of political agenda of current Moon administration is related to SDG3 including establishment of UHC. Also, K-SDGs do not include global health projects. On the other hand, most of Japan's policies related to SDG3 are global health projects including partnership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agenda discuss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s.

Finally, the government of Korea is not very interested in SDGs even though it is the country that produced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who led the MDGs era. In Japan's case, the Japanese government and Prime Minister Shinzo Abe have expressed interest in SDGs from the stage of preparation, leading the implementation of SDGs as a national project.

Policy implications obtain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As one of G20 nations, Korea must be well positioned to be an example for implementing SDGs.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be more interested in implementing SDGs and reorganize organizations and system that can enhance consistency and connectivity of SDGs implementation by utilizing existing organizational systems and policies. Also, if Korea's health policies and experience with Universal Health Care are reflected in K-SDGs and applied to the implementation of SDG3, Korea will also be able to find a leading role in global health.

Key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Global Health, SDG3